

더불어민주당 20대 공약이행 평가

공약	세부공약	현실화 여부	노력 여부	판단근거	
1.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30만원 차등지급	현재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10~20만원 차등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2016년 20만원 균등지급으로 제도 개선,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30만원으로 인상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소득하위 20% 노인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2020년 소득하위 40% 노인 연금 30만원 인상 완료, 2021년 소득하위 70% 노인 전체 연금 30만원 인상을 위한 기초연금법 개정 완료.
2.	"더 좋은"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더 좋은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 ("공공기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개정 및 예산조정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권 이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추진(경찰 소방 등 현장민생 공무원 19년 말 기준 약 6.8만명 증원,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19년말 기준 약 14.7만명 채용 등) 공공부문 신규로 고용된 청년의 비율 6.9%(2018년)로 법정 기준 넘어 별도의 입법적 개선이 불필요한 상황임. 민간부문 청년고용할당제는 청년층은 인구 감소에도 취업자는 증가하여 20개월 연속 고용률이 상승하는 추세*이며, 실업률 및 확장실업률은 6개월 연속 하락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위험논란이 있는 입법적 개선 추진하지 않음. 주 52시간 노동시간 확립, 특례업종 축소(26종에서 5종)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18.3월) 개정 완료
		청년구직활동 보장을 위한 청년안전망 구축(<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및 청년취업지원 예산 개편)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구직활동 보장을 위한 청년안전망 구축을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기 도입(50만원, 6개월, '19년 3월) 이외에도 집권 이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민간부문 청년고용 지원 추가
		청년창업환경 개선 : 예산반영	완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2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에서 혁신적인 기술 창업 소재가 있는 청년 예비 창업자를 모집하기 시작. 예비창업패키지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 예비 창업자가 원활한 창업 사업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창업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과 창업 교육, 전담 멘토 등을 묶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3.	더불어 행복한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성차별 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제정	미이행	의지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차별 성희롱 금지, 성희롱 발생 시 구제절차 구체화 필요 공감하고, 성희롱의 정의, 성차별 성희롱 시정명령을 위한 조사, 성차별 성희롱 행위 처벌 등에 대한 제정법 마련을 위해 민주당 중점법안으로 관리하고 있음.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과 '생활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대 국회 내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 미이행

	임금제' 확산으로 임금 격차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생활임금제 적용 확대 및 민간영역 확산. 2016년 공약당시 광역 기초자치단체 27개에서 102개(2017.7월 기준)
	가사근로자(가사.간병서비스 종사자)에게 최저임금 보장 및 고용보험 적용	미이행	의지없음	
	경력단절여성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및 기능 확충	완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년 4월 14일 여성가족부는 제2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확정했음. 또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고부가가치 직종을 포함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700여개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힘.
	창업여성에 창업훈련 및 컨설팅 인큐베이팅 지원 확대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일센터 창업활성화 방안 논의, 사례 발굴 및 공유 모니터링, 창업매니저 역량강화를 위한 창업 정보 제공 등 지속적 지원 강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경력단절여성기본계획 수립 초안 마련, 사전 예방지원
	여성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	미이행	의지없음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30일 이내 20일 유급휴가)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년 7월 5일 정부는 배우자 유급출산휴가 확대, 정부지원 신설해 현행 유급 3일+무급 2일에 정부지원 없음에서 유급 10일, 중소기업 5일분 정부지원하기로 함.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1월 22일일 여성가족부는 2019년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마련해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해 통상임금 40%에서 50%로 하고, 상하한액을 인상해 상한 100만원에서 120만원, 하한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함. 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의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함.
	'취학자녀돌봄휴가제' 도입(3개월 유급휴가)	미이행	의지없음	
	'칼퇴근법'으로 '저녁과 주말'을 가족과 함께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52시간 노동시간 확립, 특례업종 축소(26종 → 5종)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18.3월) 개정 완료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등은 계류 중
	단시간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적용 시각지대 해소 통해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일 가족 양립 정책 개선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18.7월, 고용보험 시행령 개정,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하고,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완화함('19.10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개업 후 5년 이내 →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폐지), 피보험자격 당연소멸기간 연장(3개월 보험료 미납 → 6개월 미납)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노동자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기준 확대(월 평균임금 190만원 미만 → 210만원 미만)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비범죄화', 성매매 유입된 아동 청소년 '피해자' 규정,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운영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매매 유입 아동 .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성매매 피해아동 .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청소년보호법을 중점법안으로 추진하고 있음.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64개소, 상담소 30개소(2019년 기준), 서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시설 . 상담소 70개소 운영 등을 통해 성매매 여성 구조지원 및 자활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복귀 도모 지속 노력
		<가족지원기본법> 마련,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차별 예방 및 지원	완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년 12월 21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가결되어 현행 법상 가족 정책의 대상을 확장,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함.
4.	경제민주화로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 제도개선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기부 소관 상생협력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완료함 : 자발적 상생 협력 기업을 발굴 * 대기업 등의 인프라를 미거래기업까지 공유, 상생의 지평 확대함. 소재 부품 장비 분야 대 중소기업간 분업적 협력을 위해 대중속업 상생협의회 설치('19.10), 법적근거 마련(소부장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상생협의회 설치 근거 반영, '20.4.1 시행), 현금유동성 대금지급 안정성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결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상생결제 제도 이용환경 개선(상생협력법 개정, '18.3) 실적 확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18.6) :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영위하고 있는 분야를 중기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보호(최초 5년), 서점, 자판기운영, LPG 소매, 두부, 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 등 8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19) 기업 간 거래 시 중소기업 단체의 교섭력 강화 : 공급원가 변동시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 가능(상생협력법 개정, '19.1), 주요 협단체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확충하여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강화(당초 14개 → 확대 69개, '1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공정거래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 보복 조치의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3배 이내), 납품대금 부당 감액 등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약정서 미교부시 과태료 부과(1천만원 이내), 경영정보의 부당 요구행위 금지 규정 도입 등(상생협력법 개정, '19.1)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도급 관련 입법 성과 : ① 하도급업체에 대한 전속거래 강요행위, 원가정보 요구 금지 ②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 협의요건을 '원재료가격 상승'에서 '노무비 등 공급원가 증가'로 확대 ③ 3배 손해배상제 적용대상 행위유형에 '보복행위' 추가 ④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복행위 원인 행위에 '조사협조' 추가 ⑤ 분쟁조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⑥ 하도급 보호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 확대 ⑦ 기술자료 단순유출도 위법행위로 명시 ⑧ 기술자료 단순유출도 위법행위로 명시 ⑨ 서면실태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 마련 ⑩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가능 가맹사업 관련 입법 성과 : ① 가맹점주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② 3배 손해배상제 적용대상 행위유형에 '보복행위' 추가 ③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본부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금지 ④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⑤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업무에 광역지자체 참여 ⑥ 광역지자체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근거 마련 ⑦ 서면실태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 마련 ⑧ 가맹본부 오너리스크에 대한 배상책임 계약서 기재 의무화 ⑨ 분쟁조정제도 정비 및 실효성 제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합 . 보복조치에 징벌적 손해배상제(3배소) 도입하는 입법 성과를 보였음. 신속한 권리 구제 및 부당 . 불법행위 시정을 위한 전속고발권 폐지,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및 사익편취 방지, 금산분리 원칙 준수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기발의(2018년 11월)했음. 그러나 전면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함.
5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한 3단	<금융소비자보호법(가칭) > 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이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3월 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됨. 소액 금융분쟁(2천만원 이내)의 경우 금융회사가 소를 제기하여 분쟁조정 과

	계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여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자제한법> 관련 법률의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에서 이탈하는 행위를 금지.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추심 매각을 금지하는 등의 금융권 추심 업무 가이드라인('09.11월 금감원 제정, '13.7월 개정)을 대부분 업체까지 확대('16.11월 개정)하여 시행('16.11.7,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 행정지도, 금융위 등록대상이 아닌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 협조요청)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소액연체채권 일괄매입은 1회성으로 진행되어 추가이행 없음.
6	국민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여야 정치권과 시민단체, 전문가그룹 등이 참여하여 우리나라가 목표로 해야 할 적정복지-적정부담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범국가차원의 논의기구 구성 추진	미이행	이행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재인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전문가, 시민단체, 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등 운영
		복지수준을 현재 OECD 평균(GDP의 21.6%)의 절반 수준에서 2020년까지 80% 수준으로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적정화해 나가야 함.	미이행	이행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서 관련 논의 진행
7.	'777플랜(쓰리세븐플랜)'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을 총괄 조정	미이행	의지없음	
		불평등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해 '777플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중장기 5개년 계획 수립	미이행	이행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러 가지 불평등 완화를 위한 조치로 인해 소득불평등도 완화 : 1분위 소득 증가폭 확대, 5분위분배율 하락 등 저소득층 소득 분배 여건 개선 *5분위배율(3/4분기 기준) (15) 4.46, (16) 4.81, (17) 5.18, (18) 5.52, (19) 5.37 불평등 완화를 위한 조치들 : ①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주거급여 '18.10월, 생계급여 '19.1월, 의료급여 '22.1월) ② 근로장려금 지급 대폭 확대 지원대상(166→334만 가구), 지원금액(85/200/250→150/260/300만원) ③ 기초연금 조기인상(25→30만원, '19.4월, 노인소득 하위 20%), 아동수당 10만원 지급(18.9월 소득하위 90%, 19.4월 모든 6세 미만(1~3월 소급지급), 19.9월 모든 7세 미만), 두누누리 사업 확대 ④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지급액 상향 50 → 60%, 지급기간 연장 최대 8→9개월), ⑤ 에너지바우처 대상 확대('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증 희귀질환자 추가) 및 단가 상향('17년 9.5 → 19년 10.9만원) ⑥ 건설현장 체불근절을 위한 공공공사 임금직불제 의무화 도입('19.6월)
	과도한 대기업의 소득을 가계소득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	미이행	이행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 최고세율 22% → 25%로 인상하고 소득세 최고세율 40% → 42%로 인상하여 그 재원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을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가계소득 증가에 노력
	기업소득 증가가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현재 시행 중인 기업 소득환류세제(사내유보금 과세)에서 임금증가에 대해 가중치 부여하여 노동소득분배율 높이도록 함)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년말 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일몰 종료하고, 투자-상생협력세제를 신설하여 고용 증가에 대한 가중치를 높인 바 있음. 고용증가에 대한 임금증가분 가중치 0.5 추가, 청년상시근로자 임금증가분 가중치 1 추가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시행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 성과공유제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방안 검토)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성과공유 제도개선('18.6) : 성과유형을 현금성 중심으로 개선, 제도개선 이후 현금공유 68.7% 증가 성과공유 참여기업 인센티브 강화해 기업의 적극적 참여 유도 : 세제혜택(법인세 감면 등, 조세법 개정), 입찰우대(국토부 고시, 지방공기업 시행령 개정 등), 평가우대(동반성장지수, 공공기관 평가 등) 통해 지난 5년('12~'16년) 대비 최근 3년('17~'19년) 성과공유 신규 참여 기업과 공유과제 수는 각각 22.1%, 42.1% 증가
	노동자간 임금 격차 완화(지자체 주도 생활임금제를 전국으로 확산, 민간기업 노동자까지 적용 유도)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1월 2일 기준 전국 광역 지자체의 평균 생활임금은 1만 110원 수준임. 생활임금제도는 서울, 경기, 인천 등 13시도에서 시행 중임.
	노동자간 임금 격차 완화(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연평균 13.5%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	미이행	이행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최저임금은 8,350원에서 8,590원으로 2.9% 상향되었음. 2019년도에는 2018년 대비 10.9% 정도가 인상 되었음.
	노동자간 임금 격차 완화(일정비율 이상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비정규직 사용 부담금제" 도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금" 최대 1,200만원(1인) 확대, 1년 미만 근속자들에 퇴직급여 적용 등을 통해 현행 비정규직 규모를 점진적으로 OECD 평균 수준(11.8%)으로 감축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임금 구간 노동자의 임금 인상으로 임금분배 구조 개선 : 최저임금 '18년 7,540원 → '19년 8,350원 → '20년 8,590원. 저임금 노동자 비중 19.0%, 임금 5분위 배율 4.67배로 '08년 조사 시작 이후 최저('18.6월) 정규직 전환 기업에 지원금 지급 및 고용형태 공시범위 확대 : 전환지원금 전환근로자 1인당 임금상승분의 80%, 간접노무비 1인당 월 30만원(1년간), 300인 이상 기업체단위 → 1,000인 이상 개별기업까지 공시범위 확대(비정규직 사용목적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정규직의 임금 사회보험 가입률 증가 등 고용구조 개선 : 19년 기준 월평균 임금 8.5만원 상승, 사회보험가입률 고용보험 1.3%, 건강보험 2.1%, 국민연금 1.3% 상승, 정규직과 임금격차 감소 62.6%→73.1%
		노동자간 임금 격차 완화(3동원칙(동일 가치노동 동일임금 동일처우) 법제화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	미이행	의지없음	
		노동자간 임금 격차 완화(재벌총수 일가의 <꿈수 연봉 공개> 방지를 위해 보수 공시제도 개선 추진 - 현행은 등기임원 중 5억원 이상인 경우만 공개)	미이행	의지없음	
		계층간 교육기회 격차 완화(고득계층간 격차완화를 위하여 중산층 서민 학부모의 고통인 대학등록금에 대하여 저소득층 대상(예 : 소득 3,600만원 이하)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및 환급 - 현 교육비 세액 공제와 중복지원 배제)	완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 본인은 전액,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계층간 교육기회 격차 완화(장기적으로는 소득하위 계층에 대하여 장학금 제도와 별개로 소득비례로 수업료를 책정하는 '소득연계형 등록금' 제도 도입 검토)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년 2월 7일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음. '18년에는 지난해 보다 499억 원 증액된 3조 6,84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저소득층 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음. .
8	국민연금이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 확충 등을 위한 국채에 투자함으로써 국민께 '더' 혜택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기금 국채투자의 일환으로 공공임대 주택 및 보육시설 확충(국가가 공공투자용 국채 발행, 국민연금기금에서 국민안심채권 매입, 채권을 통해 조성한 기금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임대주택 등 확충 사업 시행, 연금원금 및 약정 이자 상황 방식으로 진행)	미이행	의지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연금 투자로 공급된 공공임대주택,보육시설 확충은 없음
		임대주택 등의 확충을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 정부가 파이낸싱 등 사업 전 과정을 총괄하되, 실제 사업 시행은 LH	미이행	의지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연금 투자로 공급된 공공임대주택,보육시설 확충은 없음

		공사나 지자체 소속 공사에 위탁(지자체의 재정 매칭을 통한 사업규모 확대 가능).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은 지자체에 귀속			
		일반 주택과 동일한 수준의 임대주택을 짓되, 토지비용과 이자비용을 낮춤으로써 양질의 주택을 시중 임대료 대비 10~20% 저렴하게 공급하면서도 연금기금은 국채 금리 이상의 수익 달성 가능(확실적 임대주택이 아닌 가구 규모 및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학부모 수요가 높은 공공보육시설을 전체시설의 30% 수준까지 확충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비용 인상 억제)	미이행	의지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연금 투자로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은 없음
9.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부과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정부 부담 보험료에 대한 사후정산제를 도입함으로써 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 부과기준에 대한 합리적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여야합의로 관련법을 개정함. 정부부담 보험료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에 대한 사후정산제 도입을 위한 입법을 지속 추진 중임. 다만 2020년도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액은 전년 대비 1조 1,000억원을 증액시켜 역대 최대 증액을 통해 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
10.	'광복 100년, 부강한 통일한국' 건설을 위한 담대한 제안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남북정상이 합의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이행,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추진, 남북국회회담 진과 통일대비 법 제도 정비, 남북대화 정례화 상설화를 위한 남북 간 '회담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 체결, '남북합의 이행 특별위원회' 설치)	미이행	의지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을 기점으로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으며, 4.27 판문점선언, 9월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각 분야에서 합의를 이뤘으나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은 실패했으며, 이후 북미관계 개선이 지지부진진함.
		튼튼한 안보 구축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당국회담 추진(북한 4차 핵실험 이후 고조되고 있는 남북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관계 정상화를	완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성급군사회담은 한동안 열리지 않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여 만인 2018년 6월 14일 10년 6개월 만에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렸음. 8차 남북장성급회담(2018년 6월, 판문점 통일각) 9차 남북장성급회담(2018년 7월, 판문점 평화의집) 10

	위한 남북 당국회담 추진,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 가동 등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			차 남북장성급회담(2018년 10월, 판문점 통일각) 등 진행됨.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 북미회담과 6자회담 개최 등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년 4월 판문점 정상회담,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등이 진행됨.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열렸으나 합의 이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기본적인 합의 이행이 어려우며 북핵 해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개성공단 재가동 후 안정화 국제화 실현(개성공단 재가동 추진, 3통문제 해결과 3만명 규모의 근로자 제1기숙사 건립, 뷰티 건강 분야 등의 외국기업 유치, 2 3단계 확대 추진)	미이행	의지없음	
	여 야 정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통일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강화, 남북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 통일정책 추진, 서독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준용한 통일교육에 관한 국민적 합의 방안 도출)	미이행	이행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일국민협약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활발하게 하고 있음. 참여연대, 흥사단, 범사련, 종교계 등이 '평화 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 시민회의'를 발족하여 진행하고 있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환동해 환황해 남북상생 경제협력 사업 추진으로 북방대륙 진출(U자형, X자형 산업 벨트 구축 방안 모색)	미이행	의지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상황에서는 구상에만 그칠 가능성이 큼.
	남북상생경제 3대 SOC사업 추진(대륙철도 연결 아시아 하이웨이 연결 남북러 가스관 연결, 북한 인프라 개선을 위한 '한반도 인프라 개발기구' 설립)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년 6월 26일 동해선·경의선 철도 현대화를 위한 공동연구조사단을 구성한 이후 공동조사 사업 완료했으며, 심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남북 접경지역 4대 상생특구 설치(남북 접경지역에 인접 파주 산업경제 특구, 연천 포천 농업교류 특구 철원 역사문화 특구 고성 속초 관광산업 특구 설치 협의, 민통선 마을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미이행	의지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9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국제평화지대로 변모하는 비무장지대(DMZ) 인근 접경지역을 국제적 평화특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엔 총회에서 제시한 DMZ 지뢰 제거 구상에 이어 북한과의 경제특구 조성 구상을 밝히며 남북 경제협력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으나 구상에만 그칠 가능성이 큼.
	남북 자원협력 전담기구 '남북자원협력 진흥재단' 설치(광산물 수입 물량의	미이행	의지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상 이행을 위한 시도조차 없었음.

	10%를 북에서 조달한다고 가정할 경우 남측은 연간 17억 달러 이상의 수입 비용 절감)			
	평양 백두산 관광 추진과 금강산 개성 관광 재개(남북 관광협력을 통해 상호 경제적 이익 달성, 남북 주민 접촉 확대를 통한 동질성 회복)	미이행	의지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는 개별 관광을 통해 북한 관광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 내용 확인하기 어려움.
	남북 지자체 교류협력 확대(남북 지자체 대북 교류 사업 본격 추진 경평축구 경남 통일 달기 제주감귤지원 등,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협력 사업 추진)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7월 10일 통일부는 2019년 「제4차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정례회의 개최하고 있음.
	한반도 프라이카우프 추진(북에 대한 병원 건립 등과 같은 인도적 지원을 통해 생존한 이산가족 약 66,000명 전원에 대해 10년 이내 전면 상봉을 추진, 국군포로 납북자 귀환 방안 마련,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상시 운영)	미이행	이행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정상화를 위해 한미 간의 협의를 추진했으며,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를 통해 상시 상봉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남북 인권협력 추진(남북 인권대화,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한 북한주민 실질적 인권개선 추진)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6월 9일 만에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해 쌀 5만 톤을 지원하기로 함. 또, 세계보건기구 WHO를 통해 북한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의료 지원 사업도 5년 만에 재개하기로 하고 500만 달러 지원을 결정했음.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 지원(북한이탈주민 진로 취업 상담 강화와 공무원 채용 확대, 정서 심리 치료 강화와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확대)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이탈주민 채용 사업주 지원하고 있음. 2014.11.28. 이전에 입국하여 보호결정 받은 북한이탈주민 중 사회 진출 5년 이내인 자를 고용한 사업주 급여의 50% 지급, 50만 원 한도, 36개월간 지급(단, 6개월 미만 근무 후 개인사정 퇴사 시 6개월 차감 주의) 내용임.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 지원(북한이탈주민 진로 취업 상담 강화와 공무원 채용 확대, 정서 심리 치료 강화와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확대)	미이행	이행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이탈주민들의 초기 정착을 위해 지역별로 하나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중앙 차원에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금강산관광 중단 또는 5.24 조치로 인한 남북경협사업 손실보상 특별법> 과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피해지원 특별법>을 제20대 국회 최우선 법안으	미이행	이행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년 8월 15일 원혜영의원 등 15인이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냈으나 계류 중임.

	로 제정 추진(남북경협 증장기 발전 계획 수립, 정경분리 원칙 준수 - 경제사회문화교류에 대해서는 민간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안정성 다양성 확보)			
--	---	--	--	--

※ 별첨

자유한국당 20대 공약이행 평가

	공약	세부공약	현실화기준	노력기준	판단근거
1.	내수산업 활성화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U턴 경제특구 지정(U턴 전 편안한 국내 정착 유도) ○ 전국의 주요 산단 내에 U턴 경제특구 설치 ○ 강력한 인센티브 지원 - (세제지원) 철수방식 완전 철수 또는 부분 철수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법인세, 설비수입 관세감면 허용 등의 세제 지원 확대 · 설비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한도 현행 역원 배 확대 · 향후 대기업이 해외에서 부분 철수 시에도 중소기업과 동반 U턴 시 지원 확대 - (공장임대) 년 무상임대 계약방식과 임대기간 종료 시 국내 고용성과 및 지방세 납부실적 등으로 재연장 검토	미이행	이행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특구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U턴하여 지역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제, 보조금 등 각종 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기존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상 및 범위 등 확대하는 내용으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개정(2019.11.19.)
		U턴 경제특구 지정(2. U턴 후 성공적 국내 정착) ○ 유턴 경제구역에 한시적으로 최저 규제 지역으로 운영 - 유턴기업 안정화 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한 연장 및 파견 근로 허용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진출기업 부분복귀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대상을 중소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 해외진출기업(완전, 부분) 복귀시 관세감면 대상도 모든 기업으로 확대 - 감면율 한도 : 완전복귀 100%, 부분복귀 50%(한도 삭제) 신규·중고 설비 도입 시 관세 감면
		U턴 경제특구 지정(3. U턴 경제구역에 혁신의 중심점으로 육성) ○ 전용 산단에 공동 연구개발이 가능한 R&D 센터 설치 ○ 취업 희망자 직업훈련 및 재직자 기술교육을 지원하는 고급인력 양성센터 설치	미이행	미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특구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U턴하여 지역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제, 보조금 등 각종 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기존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상 및 범위 등 확대하는 내용으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개정(2019.11.19.)
			미이행	의지없음	

	<p>관광산업 활성화(1. 한국만의 경쟁력있는 문화체험관광 인프라 조성 지원 (K-POP 아래나 조성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을 리모델링하여 K-POP 본 고장의 명성에 걸맞는 대형 K-POP 아래나 공연장 조성 - 수준 높은 전문공연장에서 정기적인 K-POP 공연으로 외래관광객 유치 - 장기적으로 대도시에 전문공연장 확보하여 지방관광 활성화 (K-Culture Vally 조성 지원) - 융복합 미디어 콘텐츠와 쇼핑·문화를 아우르는 한류 콘텐츠를 집적하여 한국관광의 랜드마크 구축 - 쇼핑 음식 영화 음악 패션 등 원스톱 플랫폼 구축) 	<p>부분이행</p>	<p>이행관철</p>	<p>당초 계획에서 선정지가 변경되었을 뿐 서울 도봉구 K-POP 아래나 신축이 결정되었고, 추가적으로 다른 지역인 경기도 일산 한류 테마파크 등의 개관 계획도 추진중에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대 총선(2016년도) 공약 이후 다음해인 2017년도에 정권이 바뀔에 따라 정치적 상황과 논리에 따라 장소가 변경 되었을 뿐 k-pop 아래나 조성 자체가 미이행 된 것이 아니므로 공약 전체가 미이행 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음.
	<p>관광산업 활성화(2. 자연친화적 산악관광 진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규제를 합리화 및 자연친화적산악관광 추진 근거 마련 - 국립공원과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을 제외하여 산림훼손 최소화 - 임도를 활용하여 트래킹 코스 산악자전거길 조성 -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지정하여 스포츠파크 힐링파크 친환경농축산 테마체험시설 조성) 	<p>미이행</p>	<p>의지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10.20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후 조치 없음.
	<p>관광산업 활성화(3. 외래관광객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교통시스템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리아 투어 패스 도입) 외래관광객이 편리하게 철도와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통패스를 도입하고 관광지 이용과 숙박·음식점 할인 등으로 확대 - (K 트래블 버스 확대) 서울과 지방을 잇 	<p>완전이행</p>	<p>이행관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도 1월에 방한 외국인 대상 교통, 쇼핑, 음식점, 관광지 등을 복합 이용할 수 있는 '코리아투어카드'가 출시, 판매되고 있으므로 해당 공약이 미이행 되지 않았음. • 2016년도에 문체부 주관 시행, 2017년도 서울시로 주 사업주체가 이관되어 서울사 지방을 잇는 '트래블 버스'제도가 운영 중에 있음.

	<p>는 트래블 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외국인의 지방관광을 위한 교통편의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전용 관광 앱 제작) 교통정보 실시간 통역기 관광지 지도 기능 탑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체부, 관광공사에서 운영중인 외국인전용 관광 앱(비지트 코리아 등)이 복수의 앱이 운영 중에 있음.
	<p>관광산업 활성화(4.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웰니스 의료관광 전략적 육성) 치료를 위한 환자 유치에서 벗어나 예방과 건강증진 건강 검진 한방 뷰티 스파 찜질방 등 중심의 관광객 유치 - (특화된 벤처 여행사 육성) 웰니스 의료관광 유적지 관광 공연 전문 등 특성화) 	<p>미이행</p>	<p>의지없음</p>	<p>웰니스 관광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다만 육성 및 지원 규모가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음. 공약 발표 이후 다음해 정권 교체에 따라 정치적 여건 변화로 공약이 온전히 시행되지 못한 상황 감안 필요</p>
	<p>해양관광 활성화(1. 권역별 종합해양관광지구 및 해양관광 바닷길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 주요 해양관광도시에 요트 수중관광 해양레포츠를 모두 즐길 수 있는 종합해양관광지구 조성 및 종합해양레포츠 센터 건립 나아가 해외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해양관광리조트로 개발 - 주요 도시의 마리나 시설 수상레저체험장 해안누리길 등을 연계하여 요트 카누 카약 등을 연속적으로 즐길 수 있는 바닷길 가치 조성 * 요트를 이용한 국토대장정, 해안누리길 종주 이벤트, 해양레저스포츠 철인 3종대회 (요트, 카누, 바다수영) 등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p>미이행</p>	<p>이행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리나 비즈센터(통영 30억원), 해양레저관광거점(군산·고성·제주 및 신규 2개소 80억원) 지원 • 동북아 해양관광레저특구 조성 지원(19억원) • 종합해양관광지구 조성 추진 중 • 해양웰스케어 관광산업 육성 추진 중 • 해수부,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추진 계획 발표(18.7.11) - 크루즈 시장 대변화 및 국내 크루즈 수요 확대 - 마리나 선박 정비업 신설, 신규 마리나 창업자 의무보험료 인하 - 해중경관지구 지정, 해중공원 시범사업 등 • 「해양자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개)」 본회의 통과(20.1.9) <p>해당 공약의 경우 구체적인 정책 결과물이 전혀 없어 부분이행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게다가 마리나비즈센터 등 국비 지원 부분도 전체 사업 규모에 비하면 너무 미미.</p>

	<p>해양관광 활성화(2. 해양자원 활용한 해양치유(해양헬스케어) 관광산업 육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치유 산업화 기반 마련 위한 기초연구 및 해양헬스케어산업과 연계한 관광 콘텐츠 개발 - 재할 치유 및 레저관광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양헬스케어 시범센터 건립 및 대학 등과 연계하여 해양치유 전문지도사 등 전문 인력 양성 지원 	부분이행	이행관철	<p>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해양치유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화 지원 법률*을 제정하고, 우수 해양치유자원을 갖춘 지역에 치유센터**를 건립한다.</p> <p>*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완도(2019~2021)를 시작으로 2020년 신규 2개소 추가 선정 예정</p>
	<p>해양관광 활성화(3. 크루즈 산업 활성화 위한 인프라(선박확보, 크루즈부두, 국제여객터미널)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적선사가 고가 크루즈선 매입 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크루즈 펀드 도입 추진 -년까지 크루즈 전용부두 및 국제여객터미널을 확충하여 크루즈 관광객 수용 여건 대폭 개선 	미이행	이행노력	<p>해수부,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추진 계획 발표(18.7.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루즈 시장 대변화 및 국내 크루즈 수요 확대 - 마리나 선박 정비업 신설, 신규 마리나 창업자 의무보험료 인하 - 해중경관지구 지정, 해중공원 시범사업 등
	<p>해양관광 활성화(4. 마리나 인프라 확충 및 해양레저선박 클러스터 조성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점마리나, 어촌마리나 등 마리나 인프라 지속 확충 및 마리나산업 진입규제 완화 등을 통해 창업 촉진 - 레저선박 전문인력 교육센터 중고선박 오피마켓 등을 갖춘 해양레저선박 클러스터 조성 	미이행	이행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리나 비즈센터(통영 30억원), 해양레저관광거점(군산·고성·제주 및 신규 2개소 80억원) 지원 • 동북아 해양관광레저특구 조성 지원(19억원) • 종합해양관광지구 조성 추진 중 • 해양헬스케어 관광산업 육성 추진 중 • 해수부,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추진 계획 발표(18.7.11) - 크루즈 시장 대변화 및 국내 크루즈 수요 확대 - 마리나 선박 정비업 신설, 신규 마리나 창업자 의무보험료 인하 - 해중경관지구 지정, 해중공원 시범사업 등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개)」 본회의 통과(20.1.9) <p>해양레저선박 클러스터 조성 등 구체적인 성과가 없음.</p>
	<p>해양관광 활성화(5. 수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수중레저법」 제정 및 업종 신설, 지역별 수중레저 포인트 발굴 및 수중 레저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수중레저거점 기반조성</p>	미이행	이행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 해양관광레저특구 조성 지원(19억원) • 종합해양관광지구 조성 추진 중 • 해양헬스케어 관광산업 육성 추진 중 • 해수부,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추진 계획 발표(18.7.11)

	추진)			- 해중경관지구 지정, 해중공원 시범사업 등
2	<p>미래성장동력 육성으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p> <p>창조경제 활성화 기여 및 개인 발굴·포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조경제 활성화 및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과 격려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창조경제 대상의 범위 확대 훈격 상향 조정 인센티브 강화 등 추진 - (훈격 상향) 현재 최고 훈격인 대통령상을 훈·포장으로까지 상향 조정, 11점인 시상 개수대폭 확대 - (인센티브) 창조기업에게는 고용창출우수기업 우대지원에 준하는 세액공제, 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우선구매 제도 적용, 창조경제인에게는 APEC 기업인 카드에 준하는 우대카드를 발급하여 출입국 우대 조치 등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인 제공 - (네트워킹) 창조경제 기업과 개인들이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만남의 장을 조성 	미이행	이행노력	<p>[과방위 추가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부터 1년간 운영했음. <p>미래부에서 과기정통부로 바뀌면서 창조국 조직이 중기청(현 중소벤처기업부)으로 이전 되어 미래부에서 창조경제대상은 2017년부터는 없어졌음.</p> <p>[산중위 추가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적으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범주에 포함 • 중기부, 국민참여형 집중육성품목 도출방식 도입을 위해 '대국민 기술수요조사', '재방', '사업성 평가단' 제도 신규 도입 발표(20.3.17) -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기술이 제품화될 수 있도록 R&D 기획 단계부터 국민의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는 길 확대 <p>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6년 한시적으로 운영했다는 것으로 사실상 정책 실패라 평가할 수 있음. 공약에서 제시한 목표가 달성됐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고 다만 이행 노력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음.</p>
	<p>중견기업 전용 R&D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견기업 전용 맞춤형 R&D 지원 프로그램 도입 - 우선 R&D 수요조사('16년) → 예비타당성 조사('17년) 등을 거쳐 '18년에 1,000억원 규모로 중견기업 전용 R&D 신설 - 사업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20년까지 2,000억원 규모로 단계적 확대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합니다 -아이디어 구현에서 Scale-up까지 단계별 R&D 지원 -4차 산업혁명 유망 기술분야 중점 지원 -미래 신산업 성장의 밑거름인 소재·부품·장비 기술독립 지원 강화 • 다양한 방식으로 R&D 수요를 충족시킵니다. -(투자형) 보조금 방식에서 벗어나 先 민간투자 後 정부매칭 방식의 벤처투자형 R&D 도입을 통해 하이테크 기술의 상용화 촉진 -(규제해결형) 기술개발 결과물의 사업화에 장애가 되는 인증규제 스펙 등에 사전대응토록 규제컨설팅, R&D 패키지 지원 -(소셜벤처형) 사회적 가치평가를 반영한 구분공모로 혁신적 기술과아이디어에 도전하는 소셜벤처 활성화를 지원 -(재도전형) 미래유망 업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전환 및 축적된 기술·노하우에 기반한 재기지원 등 재도전 지원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産·學·研 간 연결과 협업을 강화합니다. -산학연 협력 R&D를 39% → 50% 로 확대 -기술파트너 매칭지원 서비스* 도입으로 Start-up 등의 혁신역량 지원 -Fraunhofer*형의 위탁개발 R&D 도입 - Tech-Bridge R&D*로 學·研 보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중소기업 특허공제 제도 도입(○ 중소기업이 특허분쟁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허소송 이외에도 해외 지재권 출원·특허전략 수립 등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중소기업 특허공제 제도를 도입 - 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평상시에는 소액의 월별부금을 납입하고, 특허소송·심판·해외출원 등 지식재산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 일정 한도 내에서 필요비용을 우선원해 주고 10년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용 - 「발명진흥법」에 법적근거를 마련)	완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허공제제도 도입을 위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안(김기선 의원 발의)이 2017.11.09 통과됨. 특허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매월 소액의 공제부금을 납입하고, 해외 출원을 하거나 특허분쟁이 발생할 경우, 필요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받아 활용하고 대여받은 자금은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하여 상환함. 또한 자금 대여 이외에도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여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지재권 관련 애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몰 조항 폐지(○ '17년 12월 31일까지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일몰 조항 폐지)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7인) 수정 가결됨.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되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3년 후 만료될 예정(2017년 12월 31일)임에 따라 그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함.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한 것으로 일몰 조항 폐지는 되지 않았음. 2020.01.10 벤처투자촉진법이 개정됨. 벤처투자촉진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각각 분산 규정됐던 벤처투자제도를 일원화하고 체계화. 벤처기업육성법은 벤처기업 확인요건 중에서 보증·대출 유형을 폐지하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규정함. 이행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몰 조항 폐지 ○ 시장친화적으로 법안의 주요 내용 개편 -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관 중심의 벤처확인제도를 벤처캐피탈 등 민간주도로 재설계 등	부분이행	이행관철	
3	국민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청년희망아카데미 전국 확대(○ 현재 서울에서 운영되는 청년희망아카데미를 3년 내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하여, 지역 청년들에게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미이행	의지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청년기본법」 통과 주력(20.1.9 통과)

		지역 내 청년과 기업 간 일자리 매칭 추진 (※청년희망펀드 활용방안 검토) - 청년희망아카데미 내 미래역량교육프로그램(FCP), 엔지니어링아카데미프로그램(E.A.P), K-JOB 프로그램 신규 도입으로 맞춤형 일자리 확대)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확대(○ 경력 개발형 새일센터 확대, 고부가가치 직종 여성전문인력 양성 확대 운영)	미이행	이행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기관인 전국 158개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하 새일센터)에서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한 취·창업 지원 뿐 아니라 재직 여성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노무상담 등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등 경력단절예방까지 종합적으로 지원 새일센터 35개소에서 60개소로 확대 계획 발표 (20.01.13)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확대(○ 경력단절여성 채용 수요가 많은 주요 산업별 협회와 네트워킹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 발굴 강화)	미이행	의지없음	<p><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의원 등 10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서비스 전달체계의 체계적 구축 등을 통해 여성이 경력 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개)」으로 상담업무 추가 새일센터에서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노무상담 등 경력단절 예방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등 지원 새일센터 35개소에서 60개소로 확대 계획 발표(20.1.13)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확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관련 부처 인프라와 연계하여 경력단절여성 창업지원 강화)	미이행	의지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행사를 개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확대(○ 취업여성의 재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온-오프라인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및 상담서비스 신규 제공)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상담 업무를 추가함.

		<p>어르신 일자리 확대(○ '17년 ~ '20년까지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매년 만개씩 확대 공급 → ('20년) 78.7만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 어르신을 위한 공익활동 매년 6만개씩 확대, 어르신 민간취업 일자리 매년 3만개씩 확대 - 어르신의 재능나눔은 매년 1만개씩 확대, 활동 지원기간 연장(현행 6개월→9개월)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일자리 확대('17년 46.7만명→'18년 51만명) • 공익활동, 재능나눔, 민간일자리 등 노인일자리 10만개 추가 확대('18년 51만명→'19년 61만명)
		<p>어르신 일자리 확대(○ 어르신 채용기업은 노인친화기업으로 지정, 공공기관 노인생산물 우선 구매 등을 권장하는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개 시도에 취업교육센터('15년 6개소 → '16년 8개소, 개소당 50백만원)를 지정하여 맞춤형 직무설계 및 직무 교육 실시) 	미이행	의지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천정배의원 등 12인)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2인) •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0인) <p>법률 3개 국회 계류중</p>
		<p>어르신 일자리 확대(○ 모든 시군구에 어르신 일자리 전담기관을 확대 설치하고, 어르신 일자리 전담인력에 대한 처우를 사회복지사 수준으로 개선)</p>	부분이행	이행관철	<p>[복지위 수정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르신일자리 확대('17년 46.7만명 → '18년 51만명) • 공익활동, 재능나눔, 민간일자리 등 어르신일자리 10만개 추가 확대('18년 51만명 → '19년 61만명) - '20년에는 74만개로 확대 예정 • 어르신일자리 관련 법안 국회 계류 중 • 지자체별로 어르신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운영 중
4.	가게 부담 확 낮추겠습니다!	<p>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고된 소득을 그대로 인정하여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자동차, 재산, 가족의 경제능력 등을 평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던 평가소득은 제외)</p>	미이행	의지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당은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즉각 폐지하여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제로 일원화 하는 것을 추진중 • 우선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폐지하는 법안이 기 발의되어 있음
		<p>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평가소득을 없애는 경우 소득이 없거나 소득자료가 파악되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는</p>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소득 이하의 지역가입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당 소속의원 17.2.10 발의, 17.3.30 본회의 통과

		<p>보험료 부과 기준이 없게 되므로 이러한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서는 최저보험료 제도를 도입 (세대당 평균 1만원 내외 인하효과 예상)</p>			
		<p>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자동차의 경우 일부 고가의 자동차는 제외 하고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할 계획(세대당 약 11,000원 정도의 보험료 인하효과)</p>	미이행	이행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폐지하는 법안 당 소속 의원 기발의
		<p>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서민층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중장기 로드맵 마련 노력)</p>	미이행	의지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가입자에게 부당하게 부과되는 재산에 대한 건보료부과를 폐지하고 소득 중심 부과체제로 일원화 추진중
		<p>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월급 이외에 충분한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나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능력에 맞게 보험료 부과)</p>	완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06.12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소득이 3400만 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3억 4,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 4000만 원 (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도록 변경
		<p>취약계층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전국 17개 광역시·도 치매어르신, 장애인 등 2만여명의 취약계층에게 착용이 간편한 안심 팔찌와 특화서비스(위치확인서비스 등)를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어르신이 길을 잃었을 때 단말기에 내장된 위치확인시스템을 통해 치매어르신 위치 확인 - 안심존(Zone)을 설정하여 치매어르신이 지정된 지역을 벗어나면 보호자에게 알려줌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지자체에서 안심팔찌 배포
		<p>경력단절 주부 등 1인 1국민연금 체계 구축(○ 경력단절 주부들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전업주부의 추납을 허용, 446만명에게 국민연금의 혜택을 더 확대할 예정)</p>	완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업주부 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허용,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 마련 등의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에 국민연금 혜택을 받도록 함.
		<p>경력단절 주부 등 1인 1국민연금 체계 구축(○ 청년 대상 두루누리</p>	완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두루누리 사회보험이 시행 중. 청년 포함.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 대상.

		<p>사회보험(창업크레딧/취업크레딧 등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크레딧) 18~34세 청년이 창업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 20% 추가 지원(4.4만명) - (취업 크레딧) 18~34세 청년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 시 연금보험료 10% 추가 지원(30만명) 			
5.	사교육비를 대폭 경감하겠습니다!	<p>저소득층 사교육비 경감 추진(○ 사교육 수요가 높은 영어, 수학, 예체능 교과에 집중 대응하여,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체계 내에서 흡수할 계획)</p>	미이행	이행노력	<p>=저소득층 사교육비 경감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개)」 본회의 통과(19.3.1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은 동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 •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운영방안 발표(20.1.8) - 올해 3월부터 1만4610실 운영(700실 확충), 30만 4천명 학생들에게 제공 • 국가장학금 재능봉사단 멘토링 캠프 진행('16년~'17년) - 방학기간동안 대학생 멘토가 초·중·고교생에게 학습지도 및 진로, 고민상담 등의 멘토링을 해주는 프로그램 진행
		<p>저소득층 사교육비 경감 추진(○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대 등 학교급 별 맞춤형 정책을 꾸준히 추진)</p>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에 7,395실이었던 초등돌봄교실이 2016년에는 11,698실로 대폭 확대되었고, 수혜를 받는 학생도 2013년 16만명에서 24만 4천여명으로 약 8만 4천명이 증가함. • 1, 2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돌봄교실은 질 높고 안전한 서비스로 내실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들은 학년 특성을 반영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돌봄교실을 도입하여 전학년 맞춤형 돌봄프로그램을 완성함.
		<p>저소득층 사교육비 경감 추진(○ 저소득층 사교육비 경감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 대상으로 수학·영어·예체능 과목 등에 대한 한국 장학재단 주관사업인 대학생 지식봉사활동을 연계하여 전국으로 확대)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장학금 지식봉사단*’은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필요로 하는 곳에 봉사함으로써, 자신이 받은 혜택을 사회에 되돌려 주고자 하는 취지로 출범시킴.

		<p>무료 온라인공개강좌 서비스 활성화(○ K-MOOC 개설 강좌를 확대하여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학습자의 요구에 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설 강좌수 '15년 현재 10개 대학*에서 27개 → '16년 100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 *경희대, 고려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포항공과대,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 MOOC 서비스 활성화 관련> • 인문·사회·공학 등의 강좌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직업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K- MOOC강좌를 지속 개발·제공하고 있으며 기업 직무수행 등 활용으로 꾸준한 강좌수 확대를 보이고 있음. '22년까지 약 1,200개 이상 강좌를 운영할 계획 - (강좌수) 2016년 143강좌, 2017년 324강좌, 2018년 510강좌 - (수강자수) 2016년 181,651명, 2017년 295,460명, 2018년 776,026명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인정 학습 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개) 국무회의 심의·의결(18.11.6) - K- MOOC 강좌를 이수한 경우, 대학생이 아닌 일반 국민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
		<p>무료 온라인공개강좌 서비스 활성화(○ 다양한 이수결과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학습자의 적극적 수강 유인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오프라인 대학에서 K-MOOC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 활용* 형태 확산 * 온-오프라인 혼합 수업(Blended Learning), 거꾸로 수업(flipped learning), 학습부진·부적응학생 대상 반복학습 등 - 대학별로 정하는 일정 요건에 따라 학점인정 시범운영으로 학습의 시·공간적 제약을 완화하고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 경감 - 개인 학습자의 자기계발 활용 외에 공공기관·민간기업의 직원 전문성 함양을 위한 직원 재교육 시, K-MOOC 강좌 활용 확대 ※ 재직자가 K-MOOC 강좌 이수 시, 소속 기관의 교육훈련 시간으로 인정받는 방안 추진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국민이 K-MOOC를 듣는데 그치지 않고 이수결과를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K-MOOC 학점은행제 과정”을 '19. 9월에 최초 개시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법령('18.11.) 개정 완료, 학점은행제 학점과정 운영을 위한 시험 부정방지 등 K-MOOC 플랫폼 기능 개선 및 평가인정 실시('19.상.)
		<p>EBS-2TV 본방송 조기실시(○ 무료로 제공되는 지상파 EBS-TV(교육방송)의</p>	부분이행	이행관철	<p><EBS- 2TV 본방송 관련></p>

	<p>채널을 한 개 더 추가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층의 초·중등학생 교과목 학습용 프로그램과 영어학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연간 1,800억원 이상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 - 신규채널(EBS-2TV)의 조기 방송을 위해 방송법령을 개정하고,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위해 정부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 <p>* EBS-2TV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 : '16년 20억(시범사업용), '17년 40억, '18년 60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EBS- 2TV 시범방송 중 • 다채널방송 승인근거 및 채널 편성 관련 규정 등 신설하는 「방송법(개)」 방통위 의결(16.9.21), 국회 미방위 전체회의 상정(16.11.9) • 의무재송신 관련 「방송법(개)」 송희경 의원 입법 발의(16.11.11) - 정부안과 병합 심사했지만 현재 과방위 소위 계류 중
	<p>저소득층 영재 발굴 및 교육 지원(○ 영재교육 소외자를 고려한 맞춤형 진단검사 지원 등을 활용하여 소외자 선발 확대</p> <p>* 영재교육 소외자 수혜율 : 2.46%('12)→3.81%('15)→5.5%('16) 영재교육 소외자 유형별 저소득층 다문화 탈북학생 장애학생 등 영재 발굴을 위한 맞춤형 선발도구 개발 및 보급)</p>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던 소외계층 학생들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영재키움 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함. • 소외계층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 자아존중감 회복 등에 특히 중점을 두고 멘토링, 찾아가는 영재교육 프로그램, 방학 중 집중캠프 등을 구성·운영 •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 중 관련법령* 및 시·도별 기준 등에 따른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함.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도시·벽지 교육진흥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에 규정된 대상자) - 각 시·도교육청이 '18년 4월 23일까지 교사관찰추천제 등을 통해 선발(총 400명)할 예정임.
	<p>저소득층 영재 발굴 및 교육 지원(○ 표준화된 검사 창의성 검사 등 선발방식에서 교사들이 충분한 기간 동안 학생을 관찰하여 영재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교원의 연수 기회 확대로 교사 관찰 및 추천제 내실화 체크리스트 수혜관찰 도구 등을 활용한 선발방법 정교화 및 다양한 선발도구의 상호 보완적 활용을 통한 신뢰성 강화</p> <p>* 관찰·추천 실시기관 비율 : 81.2%('13) → 83.0%('14) → 90.0%('16) →</p>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재교육연구센터를 통해 1차 추천을 담당하는 일반 교원을 대상으로 영재성과 영재선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더불어 관찰추천 선발도구 및 GED시스템 활용 등 교사관찰추천제의 올바른 현장 정착을 위한 연수를 진행중.

	100%('17)				
	<p>저소득층 영재 발굴 및 교육 지원(○ 영재교육 소외자의 특성에 대한 기초연구 추진 및 과도기적 프로그램 지원 확대</p> <p>* 과학고 사회적 배려자 입학생 학력신장 등을 위한 Bridge 프로그램 운영 지원)</p>	부분이행	이행관철	<p><저소득층 영재 발굴 및 교육 지원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재키움 프로젝트 사업 실시('18년부터) - 교육부가 사업을 총괄하고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이 주관 및 대상자 선발하는 사업으로 소외계층 학생들의 영재성 발현을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 선발분야는 수학, 과학, 정보, 발명, 인문사회(예술, 체육은 제외) - 2019년 421명의 학생들이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재교육연구센터를 통해 1차 추천을 담당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영재성과 영재선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관찰추천 선발도구 및 GED시스템 활용 등 교사관찰추천제의 올바른 현장 정착을 위한 연수를 진행 중 	
	<p>저소득층 영재 발굴 및 교육 지원(○ 분야별 영재교육을 통하여 전문가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단계적 영재교육 지원)</p>	미이행	의지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과학 이외 예술교육, 인문사회, 정보과학 등의 수혜비율 저조하며, 분야별 확대가 필요함. • 단계적 영재교육 지원에 대한 내용은 없음. 	
6.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p>빈집 리모델링으로 1~2인 가구 임대주택 지원(○ 「도시 빈집 정비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지자체별 빈집 정비 기본계획 수립, 활용사업 지원)</p>	완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회)으로 제정되었음.
		<p>○ 빈집 관리 정보체계 구축, 토지수용권 등 제도 마련</p>	부분이행	이행관철	<p>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회)으로 제정되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감정원에서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 토지수용권은 토지수용에 따른 공익성에 대한 기여도와 개인 재산권 침해 정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임위에서 제외('16.12)
		<p>○ 빈집을 철거 후 공공시설로 활용하거나, 기금 지원을 통해 수리 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다양한 활용 사업 발굴</p>	미이행	이행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회)으로 제정되었음. 해당 내용의 근거가 되는 내용의 일부가 법안에 반영되어 있음.
		<p>빈집 리모델링으로 1~2인 가구 임대주택 지원(○ 매년 600호 수준의 정비사업 추진)</p>	미이행	이행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회)으로 제정되었음. 일부 지자체에서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시행중
		<p>신혼부부 행복주택 및 저소득층 어르신</p>	부분이행	이행관철	<p>수서, 위례 서울오류, 하남미사 등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 10곳 조성 (희망</p>

	<p>공공실버주택 조성(○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 전국 확대</p> <p>-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를 '17년까지 최대 10개 조성</p> <p>- '17년까지 행복주택 건설물량 중, 신혼부부용 투룸을 대폭 확충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등 자녀양육을 위한 편의시설도 함께 도입하는 등 신혼부부 지원을 강화</p>			<p>타운 공급)</p> <p>행복주택 정책은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연속적으로 진행되던 사업으로 새누리당의 고유 사업이라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임. 행복주택의 경우 2017년에 로드맵이 짜이고 이후 순차적으로 물량 확보. 또한 상당수 행복주택 후보지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하는 등 해당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됐다고 평가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 있음.</p>
	<p>신혼부부 행복주택 및 저소득층 어르신 공공실버주택 조성(○ 어르신의 주거복지를 위해 주거와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공공실버주택 지속 공급 민간 기부금을 활용하여 년 한 번 정기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향후 정부 재정을 활용하여 지속 공급</p> <p>* '16년~'17년 재정과 민간기부금을 공동활용하여 공공실버주택 16개동 공급('16년 11개동 선정하여 추진 중)</p> <p>- 연간 800호 수준의 공공실버주택 지속 공급)</p>	부분이행	이행관철	<p>[국토위 수정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년~'17년까지는 정부재정과 민간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하여 고령자용 영구임대주택인 공공실버주택사업을 추진함. '18년부터「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제 14조에 따라「고령자복지주택」을 사업명칭으로 사용.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건설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추진하고, 지자체 등이 희망하는 경우 고령자용 영구임대주택과 함께 국민임대.행복주택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는 2019년 고령자복지주택사업으로 12개소(1,313호 이상)를 추진중이며, 지자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지자체-LH-지방공사로부터 대상지를 제안 받아'20년은 10개소 이상(약1,000호) 선정할 예정.
	<p>공동주택 관리비 투명화 (○ 입찰 시 산출내역서에 인건비 등 산정기준을 포함하도록 하고 인건비 지급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유도)</p>	완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4조 제1항 별표3에 따르면 입찰 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과 관련해 '임금 및 수당, 보험료 등 관계법령에서 산출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고 시 별도 명시하지 않더라도 적용해야 하고, 그 밖에 발주처에서 정해야 할 산출방법 및 기준은 공고 시 명시해야 한다'
	<p>공동주택 관리비 투명화 (○ 공동주택 관리비 빅데이터를 이용, 관리비의 적정부와 및 관리여부를 검증하여 적정집행을 유도하고 투명한 집행으로 비리요인 사전 차단</p> <p>- '17년부터 전국의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비 빅데이터를 분석하여</p>	부분이행	이행관철	<p>국토위 수정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빅 데이터 기반의 K-apt시스템에 관리비 등의 내역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유사단지* 비교** 등을 통해 관리비의 적정집행 및 투명화를 유도하고 있음. * 해당 단지와 유형, 난방방식, 노후도, 세대수, 면적 등이 유사한 단지 ** K-apt의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당 단지와 유사단지를 5단계(높은수준, 다소높음, 보통, 다소낮음, 낮은수준)로 비교가능

	<p>관리비의 적정집행과 투명성 확보)</p>			<p>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K-APT에 정보를 공개하는 대상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으로 소규모 아파트 가운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제도 취지에 일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p>
	<p>공동주택 관리비 투명화(○ 비의무관리대상(약 360만세대, 전국 1,210만세대 중 약 30%)에 대해서도 의무관리대상에 적용하고 있는 규정 중</p> <p>- 관리비 내역 공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신고, 동대표 교육이수 등을 의무화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하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p> <p>- 관리사무소 의무설치 기준과 주택관리사 인정 관리실적 기준인 50세대 이상에 대하여는 관리비 내역고지 및 공개 의무화(30세대 이상은 권고)</p> <p>-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의 관리 및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여 관리비 공개 항목 수 등 결정)</p>	부분이행	이행관철	<p>「공동주택관리법」 개정('19.4.23. 공포)에 따라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국민생활 불편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9.10.24.부터 시행(관리비 공개 확대는 '20.4.24.) 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금까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관리비등을 공개해 왔으나,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하게 된다. ② 관리비, 회계감사의 결과, 공사-용역의 계약서 등 공동주택 주요정보를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하게 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결과등을 통보하거나 공사중지 등 명령을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④ 동별 대표자의 전원 사퇴 등에 따라 새로 대표자가 선출되어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는 경우, 새롭게 임기 2년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⑤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행정절차와 동의요건이 대폭 간소화된다. ⑥ 유치원 증축 확대 허용 등 행위허가 기준이 완화된다. ⑦ 관리주체가 감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고, 각종 신고서 및 신청서 서식도 개선된다.
	<p>대학 연합기숙사 확충(○ 국·공유지 등을 기숙사 건립 부지로 활용하여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 건립 확대</p> <p>- 대학 기숙사가 부족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년 2개소씩 건립 추진(지역별 기숙사 수요 분석을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p> <p>- 공공기금 또는 민간기부금, 국고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하여 건립비를</p>	미이행	이행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공공기숙사를 건설할 수 있도록'13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일부를 사학진흥기금에 위탁* * ('19년) 495.12억원 집행 완료(충북 음성, 제주 등 약 1,860호 3700여명 수용) ('20년) 528.85억원 집행 계획(서울 금천, 한국체육대학교 인근 등) - 학교법인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 및 기숙사특수목적법인(SPC)이 다양한 학교의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건립하도록 지속 지원

		<p>확보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기숙사를 제공</p> <p>* 건립비 전액 국고 지원시, 국립대 기숙사비 수준인 월 15만원(2인실 1인당)으로 공급 가능 → 공공기금으로 건립하는 기숙사(월24만원) 대비 약 60% 수준이며, 사립대 민자기숙사(월31만원) 대비 약 50% 수준)</p>			
7.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p>자영업자 세제 혜택 및 재창업자 지원 강화(○ 장기간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한 자영업자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세무조사 면제 기준도 완화)</p> <p>- 현재 자영업자 대상 소득세의 5~30% 를 감면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더해 7년 이상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인상 적용</p> <p>* 「조세특례제한법」 개정(현재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로 5~30% 차등 감면을 적용)</p> <p>- 현재 국세청에서 직전연도 수입금액대비 110% 이상 신고한 소규모 성실 자영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있는 것에 더해, 장수 자영업자에 대해 면제기준을 완화</p>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08.16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 및 세무조사 선정 제외, 신고내용 확인*(종전 사후검증) 면제를 추진
		<p>자영업자 세제 혜택 및 재창업자 지원 강화(○ 폐업 후 재창업하는 자영업자에 대해 징수·채납처분(압류 등)이 유예되는 기준 대폭 완화)</p> <p>- 현재 재창업자금을 융자받고, 채납횟수, 매출액, 채납액 등이 일정기준 이하인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해 3년간 징수 및 채납처분을 유예해 주고 있는 바, 적용대상이 늘어나도록 매출액기준(10억원</p>	미이행	이행노력	<p>[기재위 수정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세특례제한법(개) 대안 통과 <p>영세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폐업한 후 사업을 재개하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 하는 경우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채납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면제하고 5년의 범위 안에서 해당 채납액을 분할납부하도록 허용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세특례제한법(개) 대안 통과 <p>영세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세 사업자가 폐업한 후 사업을 다</p>

		<p>미만→30억원 미만) 및 채납액기준(3천만원 미만→1억원 미만)을 완화</p> <p>*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현재 연 3회미만 채납, 매출 10억원 미만, 채납액 3천만원 미만자 적용)</p>			<p>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징수가 곤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채납액에 대하여 1인당 3천만원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함.○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재개 또는 취업할 경우, 채납액 3천만원까지 납부의무 면제('18년 최초 시행, '18.7월말 현재 473명 72억 원 채납액 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고 <p>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재개 또는 취업할 경우, 채납액 3천만원까지 납부의무 면제('18년 최초 시행, '18.7월말 현재 473명 72억 원 채납액 면제)</p>
		<p>영세 소상공인이 임대료 걱정 없는 환경 조성(○ 「자율상권법」 제정을 통해 상권의 주체(임대인·상인 등)들이 자율적인 상생협약을 기반으로 상권관리기구를 조직, 상권을 관리·육성하도록 하고</p> <p>-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젠트리피케이션 방지)하기 위한 상가임대차계약 특례조항(계약갱신요구 5년→10년)을 마련하여 상인 영업권 보호)</p>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2인)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계류 중 상가건을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10년까지 확대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18.9.20)
		<p>영세 소상공인이 임대료 걱정 없는 환경 조성(○ 상권회복 요구가 절실하고 자구노력이 확고한 소상공인 밀집지역을 선별, 정부·지자체·민간이 협력하여 '20년까지 자율상권 선도구역 40곳 육성)</p>	미이행	이행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2인)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계류 중 <p>[산중위 추가의견]</p> <p><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제)」 국회 계류 중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상권 내몰림과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구도심 상권 쇠퇴로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과 지역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상생협약 체결에 대한 각종 특례 사항 등을 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 통과(18.9.20) 상가임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로 확대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강화함
8.	공정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p>저소득층 및 중소기업 재직자 국비유학 기회 확대(○ 예산 추가확보(100억), 지원 자격 및 선별기준 조정을 통해 학업성적과</p>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비장학생 대상 : 국내 4년제 대학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외 석박사 유학을 희망하는 자 꿈나래 전형(구 저소득층 특별전형)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

	수학능력이 뛰어난 저소득층 학생 및 중소기업 3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국비유학생 선발기회 확대)			층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기술기능인 전형은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로서 중소기업 2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자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 재직자 국비유학 기회 확대(석·박사 취득 기간 동안 약 2, 3년 학비 및 생활비 지원 - 저소득층 국비유학생 '16년 8명 선발 → '17년 50명 선발)	부분이행	이행관철	• 국가발전에 필요한 전략분야 및 기초학문 분야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2017년 7월 26일부터 '저소득층 및 기술·기능인 대상 국비유학생 선발(10명)'을 위한 공고함. 2명에 불과함.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 재직자 국비유학 기회 확대(○ 현실적 제약이 다소 많은 장기 유학 지원과 병행하여 단일 중소기업 3년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내 단기 국비유학 과정을 개설하여 수요 활성화 건인)	부분이행	이행관철	<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 재직자 국비유학 기회 확대 관련 > • 꿈나래 전형(구, 저소득층 특별전형)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으로 '19년도에 20명 모집 공고 • 재직자 국비유학 기회 확대 - (2017) 연수생, 중소기업 5년 이상 재직 → 3년 이상 재직으로 응시조건 완화 - (2018) 유학생, 중소기업 5년 이상 재직 → 2년 이상 재직으로 응시조건 완화
	임금체불 원천봉쇄(○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처리 * 근로기준법 : 부가금제(법원 판결로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액 만큼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 지연이자제 확대(퇴직 + 재직근로자),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시 불이익 부여 등 추진 * 최저임금법 : 최저임금 위반 시, 형사처벌 대신 즉시 과태료 부과(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 벌금 → 2천만 이하 과태료))	미이행	의지 없음	[환노위 추가의견] •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계류 • 최저임금 위반시 형사처벌 대신 즉시 과태료 부과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4인)
	임금체불 원천봉쇄(○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확대 추진 - 노무관리 전문가 등을 통해 사업장이 법외반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미이행	의지없음	환노위 추가의견] <임금체불 원천봉쇄 관련> • 「최저임금법(개)」 발의(16.6.27), 현재 국회 계류 중 - 최저임금 위반 시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 • 「근로기준법(개)」 발의(17.9.1), 현재 소위계류 중

				- 재직근로자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체불된 임금의 청산 방안을 마련 • 고용노동부, 상습 체불사업주 239명 명단공개, 383명에 대해 신용제재 실시(17.1.4) - 상습 체불사업주 164명 명단공개, 292명에 대해 신용제재 실시(17.7.3)
	인사청탁자 명단 공개(○ 해당 기관 메인 홈페이지와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에 청탁자 정보(이름, 직책 등) 및 위반내용 공개)	미이행	의지없음	인사청탁자 명단 공개 관련> • 2018년 우리당, 고용세습 관련 국정조사 요구 및 타 공기업, 공공기관 전수조사 요구 • 감사원,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 실태' 감사결과 발표 및 명단공개(19.9)
	인사청탁자 명단 공개(○ 관련 법 개정으로 시행)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등	미이행	의지없음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근절(○ 자의적인 계약 집행소지가 없도록 「국가계약법」 적용대상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의 범위 확대 - 자산 1,000억원 이상이면서 예산 500억원 이상(65개) → 예산 250억원 이상(123개)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개정)	완전이행	이행관철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개정('16.10.4)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예산 500억원 이상 기타공공기관 → 예산규모 250억원 이상 기타공공기관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근절(○ 공공기관에 대한 조달청 의무위탁대상 확대 - 공공기관의 사업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정형화된 물품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의무위탁 하도록 하여 유착관계 등을 이용한 계약비리 차단(의무위탁대상 : 2.1억원이상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 단가계약** 등 추가) * 조달사업법시행령 개정 ** 단가계약 :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정형화된 물품(예: 컴퓨터, 차량, 복사기 등)에 대해 조달청이 조건에 맞는 업체를	미이행	의지없음	• 공공기관의 입찰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현행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중 2.1억원 이상인 경우 조달청에 의무 위탁하던 것을 모든 단가계약 물품으로 확대 추진 중

		지정하고 단가에 관한 계약을 하면, 수요기관이 지정업체에 구매물량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고 구매하는 계약방식)			
		가맹점 대상 불공정 행위 근절(○ (징벌적 손해배상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허위·과장 및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 '부당하게 거래중단 또는 거절하는 행위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책임 - 징벌적 배상금액의 상한은 현행 「하도급법」 규정 고려, 3배 이내 규정 ※ 현재 「하도급법」(기술유용, 부당 단가인하 등), 「대리점법」 도입(2015년))	완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으로 통과됨.(정무위원장) 가맹사업거래에 있어 일부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3배 한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안 제37조의2 신설)
9.	서민 금융을 보호하겠습니다!	사금융 대출금리 완화(○ 인터넷 전문은행 한국카카오은행 케이뱅크 이 빅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등으로 기존 금융권 이용이 원활치 못했던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대상 10% 대 중금리 대출상품을 출시 - 향후 3년간 1.4조원대의 10%대 중금리 상품 공급)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카오뱅크는 오는 2022년까지 매년 중금리 대출 1조원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자체 중금리 대출을 연내에 선보일 예정. 케이뱅크도 올해 6천억원 규모의 중금리 대출 공급 계획을 밝히며 중금리 혜택을 강화.
		사금융 대출금리 완화(○ 자금지원 금융 취업상담 고용 복지 연계 등 서민금융 원스톱 지원을 위한 총괄기구로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기존의 휴면예금재단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통합)	완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09.23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미소금융·햇살론·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합하여 종합적·유기적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
		사금융 대출금리 완화(○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강화 - 채무자의 최소생활비 보장을 위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액을 180최소 만원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01.25 법무부는 채권자의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생계비 및 급여, 예금 등의 최저한도가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2019.02.18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시 상각채권에 대한 최대 원금감면율을 60%에서 최저 20에서 최대 70%로 상향토록함.

		(현행 150만원) 으로 확대 - 연체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대출만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은행권 신용대출 프로그램 도입 ('16 년 상반기 중 실시) - 신복위 워크아웃 추진 시 상각채권 원금감면율을 최대 50→60% 로 확대하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결여된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원금감면율을 최대 70→90% 로 확대 ('16년 상반기 중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06 연체 우려자 또는 단기 연체자의 채무관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및 '채무조정 지원정보 안내방안' 마련 시행
10.	아동이 기뻐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아동복지진흥원 설립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아동복지진흥원) 응급전화응대, 외부기관협력, 아동학대 관련 연구진행 등 체계적인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갖추고 현장 컨트롤타워 기능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 아동학대 대응 및 아동권리옹호 전담부서를 보건복지 산하 기구로 설립 - 아동학대 예방, 교육, 홍보활동 및 관련 정책 수립)	완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당 소속 김순례 의원이 총선 직후인 2016.07.29. 대표발의/ 2018.12.27. 본회의 통과
		아동복지진흥원 설립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학대트라우마 네트워크) 기존에 설치된 기관의 기능을 확대하여 학대트라우마 네트워크 구축하고 지역 내 학대트라우마 네트워크 신속 연계 - 교사의 학대의심 및 아동 정신건강 등에 대한 상담 - 지역 내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및 학대트라우마에 대한 교육 - 학대트라우마 치료 및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 및 매뉴얼 개발 등)	부분이행	이행관철	<p>[복지위 추가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12.27 통과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상담, 교육 뿐만 아니라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도 포함하고 있어 학대·트라우마 등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도 일정부분 이뤄지고 있음 네트워크 신속 연계, 매뉴얼 개발 등은 추가적으로 진행 필요
		아동복지진흥원 설립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아동학대 전담경찰관) 신규인력	미이행	이행노력	[복지위 추가의견]

	<p>충원을 통해 기존 '가정폭력전담경찰관'과 통합하여 '학대전담경찰관'(APO)으로 운영하면서 가정폭력 업무와 함께 향후 아동·노인·장애인 업무까지 전담</p> <p>- '17년까지 여성청소년업무 중심을 ① SPO(학교전담경찰관), ② APO(학대전담경찰관) 양대 전담체계와 ③ 여성청소년수사팀 3각 체제로 정립,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효율적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범죄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당소속 의원 16.06.01. 발의 추진중
	<p>아동복지진흥원 설립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아동치료병원 지정·운영) 기존 국립대학병원 인프라 활용 통해 소아과 및 소아정신과를 중심으로 한 아동 친화적 환경 속에서 같이 거주하며 중장기적 집중 심리치료 및 학교 정규교육을 받을 수 있는 병원 지정·운영)</p>	미이행	의지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2016년 시범사업 후 매년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매년 진행함. 병원이 아닌 기관·단체·대학)
	<p>아동복지진흥원 설립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단계별 학부모 교육) 예비부부, 출생신고 및 출산 전후, 자녀 연령의 단계별 부모교육이 실시되어 점진적으로 부모 됨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p>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아동학대 사전예방을 위해 부모교육, 아동인권보호 정책을 강화 방침 발표(18.03) - 우선 아동수당,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 학비 등 아동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신고 교육을 한다. 온라인 신청 부모는 교육 비디오를 의무적으로 시청하게 하고, 오프라인 신청자에게는 자료를 배부한다.
	<p>아동복지진흥원 설립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법제·개정)「피해아동지원에관한특별법」제정 및「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등 개정</p> <p>- (아동학대예방 관련) 아동학대예방 및 지원종합계획 수립, 아동학대 실태조사, 아동학대예방교육의 실시, 아동학대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설치 운영, 아동학대예방 홍보영상의 제작 및 배포, 신고의무자 교육 등</p>	미이행	이행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소속 의원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지원과 관련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별법 다수 발의함. 조속한 국회 통과 노력중

	<p>- (피해아동보호 및 지원 관련) 피해아동보호 및 지원 관련 피해아동 취학지원, 법률상담지원, 피해아동에 대한 불이익 금지, 피해아동을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학대피해아동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피해아동의 보호시설 입·퇴소 절차,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의 지정 등</p> <p>- (아동학대 대응 관련) 학대후유증 회복을 위해 피해아동보호명령에 심리 정서지원을 위한 명령 추가, 법원이 부모 또는 가족, 보호자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필요 시, 심리 정서 치료를 명하는 명령 추가 등의 개정 필요)</p>			
--	---	--	--	--

정의당 20대 공약이행 평가

공약	세부공약	현실화여부	노력여부	판단근거
1. 내월급이 오르는 경제	2019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최저임금 결정절차 개혁(최저임금법 개정)	미이행	이행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년 7월 1일 이정미의원 등 10인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최저임금 결정절차를 개혁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계류 중임. 위 법안발의 내용에는 최저임금 기준을 5인 이상 사업장 전체노동자 임금의 60% 이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과 현재의 미혼 단신 1인 생계비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 가구생계비로 개정하자는 내용도 포함됨.
	② 공기업/대기업 CEO와 고위임원은 최저임금 연동 임금상한제 도입 - 최고임금법 제정	미이행	이행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년 6월 27일 심상정의원 최고임금법 제정안과 국가제정법 개정안 발의, 최고임금법은 민간기업 임원에 관하여 최저임금의 30배, 국가제정법에는 공공기관 임원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7배로 상한을 정하는 내용을 명시함.
	① 원하청 초과이익공유제 실시와 초과이익 공유시 세제 지원 -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및 운영방안)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공유한 초과이익에 대해 30%의 세액공제 적용)	미이행	이행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년 7월 5일, 심상정의원 등 10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았음. 상생협력 모델로 초과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실효성을 높여 양극화를 완화하고 경제주체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안임. 이 안은 현재 계류 중임.
	② 성별, 고용형태별 차별금지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비정규직 고용 개선으로 여성 일자리 개선 - 성별 고용-임금실태 공시제 도입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 공기업·대기업에 5% 청년의무고용 시 30% 이상 여성할당 병행 - 임신휴직 도입, 파파키퍼제 도입, 육아휴직 급여 확대	미이행	이행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년 6월 12일 심상정의원 등 11인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냈음. 육아휴직 급여 월급지급액을 통상임금의 60%으로 상향하고, 상한액 및 하한액을 각각 150만원, 8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임.
①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두루누리사업 II 도입	미이행	이행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년 9월 21일 이정미의원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에는 노동자의 정의에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자 	

	- 특수고용노동자(1인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			성을 인정함으로써 4대보험을 적용하도록 명시했음.
	②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및 지원기간 확대 - 특수고용노동자,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등 고용보험가입자로 전환 - 자발적 이직의 경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실업상태일 경우 구직급여 지급 - 실업급여 기간 확대 : 최대 1년	미이행	이행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보험의 특수고용노동자 적용과 관련해서는 2016년 9월 21일 이정미 의원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에는 노동자의 정의에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하도록 해 노동자성을 인정함으로써 4대 보험을 적용하도록 명시했음.
	③ 실업부조(구직촉진수당) 도입 -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 없는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20일 미만인 실업자 등 - 최저임금액의 80%, 최대 1년 지원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9.7. 이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용보험법일부개정안에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 중 실업급여(청년구직촉진급여 제외) 지급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미만인 실업자 중 요건을 갖춘 경우 최저기초임액의 50%를 1년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일수로 청년구직촉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019년 3월 6일, 저소득층 구직자의 생계 보장과 취업 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의 밑그림이 노사정 합의로 마련됐음. 2020년 1월 20일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사업)으로,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가장 6개월 지급해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계획 발표함. 올해 약 20만명을 지원 대상으로 잡고 있음. 기존 취업지원 서비스는 많어도 월 20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데 그쳤음.
2. 내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간접고용 형태도 차별적 처우 금지	미이행	이행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년 11월 15일 이정미의원 등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음. 이 안은 노동관계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현행법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를 명시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균등한 처우의 원칙을 더욱 명확히 하는 것임.
	• 기간제 사용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사용기간 역시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	미이행	이행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8월 14일, 이정미의원 등 10인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모호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계류 중임. 상시 지속업무에 대해서는 계절적 업무, 질병이나 사고, 출산 등으로 인한 휴직 등에 대한 대체근로, 기간이 정해진 일시적 간헐적 업무를 제외하고는 기간제 사용을 원칙적으로

				로 금지한다는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견법 3단계 폐지: 파견대상업무 단계별 축소 → 하도급업무 등 직업안정법 적용 확대 →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파견업 금지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8월 14일 이정미 의원 등 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계류 중임. 근로자 파견의 허용 범위를 출산·질병 등으로 일시적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사용자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의제하며,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근로자파견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여 상시업무에 대한 직접고용 원칙을 확립하려는안임. ▪ 이와 함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하도급 업무 등에 대한 직업안정법 적용 확대와 관련해 "근로자 공급사업의 범위를 계약의 명칭에 관계없이 노동공급을 주되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확장하며"라는 내용으로 명시함. ▪ 2019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을 12년 만에 개정해 불법파견의 범위를 더 넓게 판단함. 이는 2015년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을 불법 파견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개념 확대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미이행	이행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9월 21일 이정미의원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에는 노동자의 정의에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자성을 인정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비정규직 감축 - 2015년 현재 863만명인 비정규직을 매년 107.8만명씩 정규직으로 전환해 4년내 절반인 431만명으로 축소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당은 2019년 8월 14일 이정미 의원 등 10인이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 4.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상시 지속업무에 대해서는 기간제와 파견 등 비정규직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현재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고용의제를 적용하여 정규직으로 전환 시킴으로서 민간부분과 공공부분 모두에 걸쳐 비정규직을 감축한다는 의지와 계획을 밝힘. ▪ 정부 발표에 따르면, 비정규직 건수는 2015년 6,012 6,271(천명), 2016년 6,156 6,444(천명), 2017년 6,444 6,578(천명) 2018년 6,578 6,614(천명)이었음. 2019년 상반기에는 6,6114(천명). 비정규직 비율은 2015년 32.0, 32.5%, 2016년 32.0, 32.8%, 2017년 32.8, 32.9%,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간접고용 상한제, 간접고용 현황 공시제 도입. 상시·지속적 일자리면 간접고용 비정규직도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 원칙 	미이행	이행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32.9, 33.0%였음. 2019년에는 33.0 (%) 수준임. ▪ 2019년 8월 14일 이정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를 망라하여 상시 지속업무인 간접고용에 대해서는 상한제보다 진전된 내용으로 원칙적으로 채용을 금지하고 현 근무자에 대해서는 고용한 것으로 간주(고용의제 적용)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제출함. ▪ 간접고용 현황 공시제는 시행규칙 사항으로 정부에 촉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확대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7월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를 연장하고,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상향하는 등 민간투자 촉진·포용성 강화를 골자로 한 2019 세법개정안을 22일 협의해 발표했다. ▪ 정의당은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는 여전히 동의하나 법률개정은 미이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당 최장 68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한 고용노동부의 탈법적 행정해석 시정 	완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3월 6일 이정미 의원 대표발의로 해서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규정하고 1주간의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상한 포함 주 52시간제 시행의 법률적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실노동시간 단축에 역행하는 근로기준법 독소조항 개정 	미이행	이행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3월 6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계류 중임. 이 법은 모든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과 유급휴게시간 제도 도입, 포괄임금제 계약 금지,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 및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규정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함. 여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민간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5시 칼퇴근법(9to5) 도입 	미이행	이행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3월 6일, 이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현행 8시간 근무 시 주어지는 휴게시간 1시간을 유급화하는 근무시간을 1시간 단축하자는 9t5 법 도입 공약 내용이 포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1,800시간 노동시간상한제 관련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창출 지원법」 제정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당은 2017년 3월 6일 이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개정안에는 연 18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달성을 위해 5인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여 주52시간상한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1주의 근로시간을 휴일을 포

				<p>함한 7일로 규정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유급휴게시간을 포함하여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또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유급휴게시간을 신설하고 근로일 종료 후 연속 휴게시간을 주도록 하며,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민간기업에도 유급휴일로 주도록 하는 등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7년 특별연장근로 신청 건수는 22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967건으로 4000% 이상 폭증했음. 정파기업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을 승인한 건수 역시 15건(2017년)에서 910건(2019년)으로 급증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루에 한시간 씩 더 일하고 주 4일만 근무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제 도입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년 3월 28일, 근로자가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재정지원이 크게 확대됨. 유연근무제를 적용하는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5일 전일제 대신 재택근무나 시간제, 요일제 등 다양한 형태로 일을 함.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재정지원을 강화함. 지원 대상을 현재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지원금도 연간 최대 364만원에서 520만원으로 인상 정의당은 유연근무제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발적 의지에 의한 선택에 한해 제한적으로는 인정함. 그러나 사용자가 법정근로시간제를 회피하여 고용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임금을 저하할 목적의 비자발적 또는 반강제적 유연근무로 악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좀 더 신중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노동자에게 연간 30일 이상 유급휴가 보장 	미이행	의지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당은 이번 제21대 총선 공약으로 현행 최소 1년 근속시 15일로 되어 있는 연차휴가를 25일로 확대하는 공약을 제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공휴일/국경일 유급휴일화 	미이행	이행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2017년 3월 6일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민간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6개월 이상 	미이행	의지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기법상 2012년부터 1년 미만자라도 1개월 개근시 1일 유

	재직한 노동자에게 유급휴가 부여			<p>급 휴가를 부여하고 있음. 현재 고용형태에 따라 유급휴가를 미적용하는 경우는 초단시간(4주간 1주 평균 15시간 미만) 비정규직노동자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당은 이번 총선 공약에 초단시간노동자에게도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함으로써 주 1회, 월 1회 유급휴일을 주지 않기 위한 쪼개기 계약을 근절하는 공약을 제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사 첫해부터 여름휴가 1주일 의무제 실시, 최소 2주 휴가제 도입 	미이행	의지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별 공휴일제도 도입 	미이행	의지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 - 직장내 폭언·폭행을 포함한 지속적인 괴롭힘 처벌 및 산업재해 인정 -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완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년 3월 2일 이정미 의원 등 12인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을 발의함. 결국 2018년 12월 27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1월 16일부터 시행 중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정노동 보호 관련 법제화 - 감정노동에 대한 사업장 내 예방조치 의무화 -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 및 자살 산재인정 법제화 - 고객에 의한 성희롱 방지 법제화 	완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년 3월 30일 위원안으로 산업안전보건법 : 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됨. 이 법률안은 사업주로부터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감정노동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대기업에 매년 정원의 5%이상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 - 2014년 공공부문 정원 30만명 기준 5% 할당 시 약 1.5만개 일자리 - 2014년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 459만명 기준 5% 할당 시 약 23만개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장 대안(2018.12.27. 제안, 2018.12.27. 처리)이 2018년 12월 27일 통과됨. 이 법률안은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청년고용의무 미이행기관의 현황 및 경영평가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공공기관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청년고용의무 이행을 촉진하려는 것임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고용 인원의 일정 비율을 고졸 이하, 전문대 및 지방대 졸업자 등에게 할당하고, 여성비율도 30% 이상으로 하는 기획균형채용제도 병행 15-34세 미취업자 중 지원이 필요한 청년에게 청년디딤돌급여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이 필요한 청년에게 월 50만원, 연간 최대 540만을 제공하는 청년급여는 청년세대의 위기에 특성화된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임. 민간위탁 학원 중심의 정부 정책과 달리 공공 위주의 내실 있는 직업훈련과 연계 	미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4월 29일 이정미의원 등 11인이 이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계류 중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발적 이직자와 아르바이트 재학생,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당은 2016년 9월 7일 이정미 의원이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 중 실업급여(청년구직 촉진급여는 제외) 지급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실업자 중 요건을 갖춘 경우 최저기초일액의 50%를 1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로 청년구직촉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년 미만 퇴직자에게도 퇴직금 보장 	미이행	의지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년 9월 7일 이정미의원 등 10인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음. 2018년 6월 26일, 정부가 직장을 제 발로 떠난 퇴사자에게 실업급여를 주는 방안에 무게를 둬.. 추가적인 재원 소요에 따른 고용보험료 인상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됨. 정의당은 이번 제21대 총선 공약에는 “퇴직금 적용 대상 확대 : 3개월 이상 근무자와 초단시간노동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공약함.
3.	재벌개혁과 '을' 살리는 경제민주화 실현	① 3년 내 기존 계열사간 순환출자 해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년 12월 31일, 추혜선 의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기존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음. 재벌 스스로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요구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15대 대기업집단이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음 내용은 많이 부족하나 다소 개선됐음.
		②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및 소액주주/근로자 대표 추천 이사 선임 - 상법 개정	미이행	이행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당 故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 등 공약이행을 위해 노력했지만, 거대정당에 가로막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③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 상법 및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미이행	이행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에는 집중투표제의 활성화를 위해 의무화를 담은 3개의 상법 개정안(김종인 의원안, 채이배 의원안, 노회찬 의원안 각각 대표발의)이 제출돼 있지만 계류 중임.

		관한 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당 故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 등 공약이행을 위해 노력했지만, 거대정당에 가로막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④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공익적 의결권 행사 강화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시행
		⑤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 및 제재방안 강화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	미이행	이행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혜선 의원이 금융사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규정 강화해 대주주가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을 사금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음. 입법취지는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임.
		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 등 징벌적 조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손배 적용범위 확대 및 한도 증액)	미이행	이행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년 7월 5일 전혜철의원 등 11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음. 이 안에는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금지 등의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손해의 3배에 해당하는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② 공익적 시민단체 고발권 부여 및 집단소송제 도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	미이행	이행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국회 계류 중임. 추혜선 의원도 채이배의원 대표발의안을 공동 발의하여 초당적으로 협력함.
		③ 소비자 보호 및 피해 당사자 권리 강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불공정거래 피해자 해당행위 금지 청구제) - 소비자기본법 개정(소비자보호기금설립 및 피해규제 명령제)	미이행	이행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정부 개정안(민병두 의원)이 국회 계류 중임. 정의당 추혜선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여 초당적으로 협력함.
		① 재벌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행위 근절 - 상속·증여세법 개정(정상거래비율, 한계지분을 차감 없이 전체 적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규제대상 지분 요건 20%로 하향)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업무상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10월 14일, 최근 6~7년간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일부 총수 일가나 재벌그룹이 규제를 회피하려 한다는 의심을 뒷받침해주는 실증 분석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놨음.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음. 이 개정안엔 규제망을 더 넓은 내용이 담겼음. 공정위가 지난해 말 제출한 개정안은 규제 적용 요건 중 하나인 총수

		배임·횡령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적용)		일가 지분율 기준을 현행 30%를, 2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1월 5일,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거래 정비(상증령 §34의2)됨. 	
		② 조세포탈, 횡령, 배임 행위 형량 강화 등 유전무죄 근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50억 이상 배임 횡령죄 집행유예 불가) - 재벌 일가 황제면회/황제노역 금지, 형집행정지와 가석방 및 사면 제한 - 상법 개정(특가법 상 징역형 이상 선고 받은 자 기업체 임원 등록 제한)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5월 '특경가법 시행령'이 개정돼 2019년 11월 8일부터 시행 중인, 기존 시행령에서는 배임 횡령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으로 유죄가 확정된 기업인은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보는 제3자 관련 기업체에 대해서만 취입이 제한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다니던 회사에도 일정 기간 복귀할 수 없게 됐음.
		①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재벌대기업의 갑질(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점공정화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17년 7월, 심상정) : 최저임금 인상 등 가맹점 어려움 발생시 가맹본부와 가맹금 조정 가능 대리점법 개정안 발의(19년 1월, 추혜선) :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 보장 등 대리점 보호 강화 가맹정 공정거래(정부 발표) : 가맹점 단체 신고제 도입 및 가맹본부의 협의 개시 의무화 추진, 광고 판촉행사시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의무화 추진, 가맹점(편의점) 영업시간 단축요건 완화, 가맹점주의 귀책사유 없는 계약 해지시 위약금 면제 추진,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안 승인 등
		②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재벌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중소기업 적합업종 확대 및 강제조정권) - 국토계획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대형마트 허가제 및 영업 제한)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통산업발전법, 국토계획법 개정안 발의(17년 1월, 노회찬) : 도시계획 입안단계부터 대규모점포 규제,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생계형 적합업종법 시행(18년 12월)
		③ 대기업의 초과이익, 혁신이익을 공유하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및 운영방안)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초과이익공유제 도입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 2018년 11월 6일, 협력사의 혁신성고가 대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연결 되도록 위탁기업 등의 재무적 이익을 협력사와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가 도입됨. 이미 글로벌 혁신기업,

					국내 신산업 및 제조업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협력이익 공유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원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함
		④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소상공인단체 집단적 교섭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법, 대리점공정화법 개정 	미이행	이행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리점법 개정안 발의(19년 1월, 추혜선) :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권 신설, 대리점법 적용제외 조항 축소로 법 적용범위 확대, 대리점 계약 갱신요구권 도입 및 본사의 대리점 계약 해지 제한, 가맹점 대리점 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 도입
		⑤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이익공유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점공정화법과 하도급법 개정 	미이행	이행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1월 17일, 지난해 차액가맹금에 이어 올해는 이익공유제가 프랜차이즈업계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음. 최근 남양유업발 협력이익공유제의 후폭풍이 프랜차이즈업계까지 확산됨. 지난 2017년 5월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가맹본부의 이익 중 가맹본부가 설정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가맹점사업자와 공유하는 내용의 초과이익공유제를 가맹사업 분야에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개정안이 시장 원리를 거스른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임.
		⑥ 중소기업인 카드수수료 인하 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신용카드 1% 이하, 체크카드 0%)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년 2월 7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중소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음. 계류 중임. 정부 대책 발표 : 우대수수료를 적용범위 확대, 수수료 상한 인하
		⑦ 소상공인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소상공인보호및지원법 개정(보험료 50% 지원)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대책 발표 : 2020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1. 접수기간 : 2020. 1. 1 ~ 2020. 12. 31 2. 신청대상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3. 지원내용 : 기준보수등급별 월 보험료의 30%를 3년간 지원
4.	정의로운 조세개혁으로 서민 복지재정 확충	① 안정적인 사회복지 재정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세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세법 제정(소득·법인·상속증여세 세액 등에 10~20% 부과) 	미이행	이행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7.21. 윤소하의원 대표로 '사회복지세법 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의 운영구조 상 원내교섭단체 간 협의 과정에 참여할 수 없어 반영이 안 되어 계류 중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법인세 최고세율 MB정부 감세 이전인 25%로 환원 - 법인세법 개정(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22%에서 25%로 개정) 	완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기형적인 소득세 세율 체계 전면개편, 누진세율 강화 - 소득세법 개정(소득세율 체계 [5-15-25-35-45%]로 개편)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부동산 보유세 과세 체계 전면 개편 및 과세강화 •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현행 평균 65%에서 80%로 상향 •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세를 지방세인 종합부세로 단일화. 합산 과세 및 최고 세율은 2008년 종합부세 수준으로 상향함 - 종합부동산세법 폐지, 지방세법 개정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부세법 개정안 발의(18년 9월, 심상정)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2008년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세율 상향 조정),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2018.9.11. 심상정의원 종합부세 강화법안 발의했으나 대안반영 폐기되었고, 정부 종합부동산세 공시지가 상향 조정 ▪ 정부대책 발표(19년 12월) : 종합부세 세율 상향 조정, 공시가격 현실화를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⑤ 금융소득에 대한 특혜성 세율적용 폐지 - 소득세법 개정(주식양도소득 누진세율 적용,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1천만원으로 인하)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중소기업 공유이익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하청·협력업체와 공유한 초과이익에 대해 30%의 세액공제 적용)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사내유보금 10% 할증과세 도입 - 법인세법 개정(사내유보금의 이자·배당·임대료 수익 등에 10% 할증 과세) 	미이행	이행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11.01. 2017.11.10. 2회에 걸쳐故 노회찬의원이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의 운영구조상 원내교섭단체 간 협의 과정에 참여할 수 없어 반영이 안 되고 계류 중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거액 편법 증여에 대한 증여세 재계산제도 확대 강화 	미이행	이행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10.31.31, 2017.11.09. 2회에 걸쳐故 노회찬의원이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의 운영구조상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증여 재산 폭등시 재계산제 강화, 세대생략 상속·증여의 경우 할증과세를 일괄 50%로 강화) 			내교섭단체 간 협의 과정에 참여할 수 없어 반영이 안 되고 계류 중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상속공제 5억으로 축소, 고액상속 과세 강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상속공제 단순화하고 한도를 5억원으로 하향) 	미이행	이행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국회의 운영구조상 원내교섭단체 간 협의 과정에 참여할 수 없어 반영이 안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생애 최초 소득자에 대한 "파이팅"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생애최초 소득자에 1백만원까지 세액공제) 	미이행	의지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중 소형 승용차 대상 개별소비세 폐지 - 개별소비세법 개정(배기량 2천CC 미만의 중 소형 승용차 폐지) 	미이행	의지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세입자 전월세 세액공제 확대 및 이사비 공제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월세 세액공제율 15%로 확대, 전월세 이사비용 적용)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11.01.故 노회찬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세 일부개정법률개정안 발의 ▪ 세액공제율 12%로 확대(2017년 7 기재부 발표, 2018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현행 1인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세액공제 확대)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규모 예산 사업 등에 전국민 참여예산제 실시 - 국가재정법 개정(연말정산 시 재정현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내용 포함) 	완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민 참여예산제 시행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탈세 및 부정당입찰에 대한 처벌 강화 - 국제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가계약법 등 개정 	미이행	이행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05.24. 이정미 의원을 대표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계류 중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예산실명제 도입, 쪽지예산 카톡예산 근절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국회의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이전에 빈발했던 쪽지예산, 카톡예산은 사라지고, 서면질의(증액)에 의한 것이 대부분

		국회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증액예산은 의원 실명과 함께 증액 필요성을 서면으로만 제출)			분임.
5.	정의로운 복지로 OECD 평균복지국가 달성	① 태아·영유아 - 산모·영유아 방문간호사제 도입, 핀란드형 마더박스 제공 - 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파파퀴터제 도입, 출산전후휴가 확대, 가족돌봄휴가제 신설 - 국공립어린이집 비중 확대, 민간 어린이집 교사 임금 인상 등 처우개선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8.27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됨. 2019.6.10 전체 어린이집 영유아 중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 등 공공 보육 이용 아동은 '15년 21.4%→'18년 25.2%로 증가로 나타남. 보육교사 평균 급여는 213만 원으로 '15년 184.3만 원보다 증가한 반면, 1일 총 근로시간은 9시간 7분으로 '15년 9시간 36분보다 감소.
		② 아동·청소년 -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제 및 자녀담당의사 도입 - 아동학대 신고시스템 정비, 학교사회복지사 및 전문상담교사 확충 등 - 초중고학교 10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 안심알바신고센터 확대 등 알바 권리 보장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당은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제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윤소하, 2016.06.08.)을 대표발의했고, 대안반영 후 폐기됨. 2017년 10월부터 정부는 어린이병원비 중 급여비 본인부담율을 10~20%에서 5%로 인하함. 이후 윤소하 의원이 다시 대표발의(2019.10.12.)함. 전문상담교사는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특수교사와 함께 증원하고 있음 문지연정부의 계획이고, 이행되고 있음.
		③ 청년 - 미취업 청년에게 디딤돌 급여 지급 - 국가표준등록금 도입으로 진짜 반값등록금 실현 - 반값임대 공정주택 건설, 만19세 이상 안심대출제도 도입, 주거급여 확대 - 공기업·대기업 5% 청년고용할당제, 여성·고졸·지방 기회균형채용 제도 도입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12.27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청년고용의무 미이행기관의 현황 및 경영평가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공공기관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청년고용의무 이행을 제고함. 하지만 현행 3% 고용 법률 조차 이행하고 있지 않음.
		④ 중장년 - 저소득층 부채탕감과 악성 부실채권 규제 - 4대 가계비(통신·주거·교육·의료) 절감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계비 절감 수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국민행복기금 보유채권(257만명)중 소액·장기연체채권(대상 :1천만 원이하 &10년이상 연체,40만명 1.9조원)에 대한 감면 등 적극적 정리방안 마련('17.11월)하고,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전 소액·장기연체채권에 대해서도 매입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17.11월) 통신비 관련해서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택약정 할인 폭을 기존 20%에서 25%로 확대하고, 의료비 관련해서 문재인케어를 통해 현재 63%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임.
		⑤ 노년 - 부양의무제 폐지, 공적연금 하나로 OECD 수준 노후소득 보장 - 공공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및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공공실버주택 확대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당은 부양의무제 폐지를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윤소하, 2017.02.24.)을 대표 발의함. 현재 정부는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경우 완화된 상태임. 정부는 시도별 사회서비스원 선도사업 시행 중이며, 노인에게 건강관리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인 '케어안심주택' 4만호 공급 추진(복지부, 18년 11월 발표)
		① 의료 - 건강보험 보장률 80% 이상 확대로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실시 - 전국민건강 담당의사 도입, OECD 수준 보건의로 인력 확충 - 의료영리화 추진 반대, 공공병원 확충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종합대책에 따라 2022년까지 비급여 전면 급여화. 보장률 70% 달성을 시행 중임. 또한 급여비에 한정하긴 했으나 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도 제도화함. 정의당은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안(윤소하, 2018.01.25.)을 대표발의함. 대다수 국민들은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에 대한 보완책으로 민간의료보험에 별도로 가입해 의료불안을 해결하고 있고, 그동안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보다는 민간의료보험에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을 맡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하에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시행해왔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민간의료보험도 최소한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민간의료보험을 정상화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제주영리병원 등은 무산된 상황임.
		② 주거 - 주거비지원 확대 및 반값임대공정주택(정의stay) 연간 15만호 공급(OECD 평균 12% 목표) -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공정임대료 도입 -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상시공개 및 분양가상한제 민간아파트 확대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17년 3월, 노희찬) :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계약기간 2년 → 3년 정부 대책 발표(19년 12월)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유치원 누리과정 100% 국가책임제 - 초등학교 2배 확대, 고교 무상교육 도입, 대학균형발전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 누리과정 국가책임제는 도입되었음. 유치원 누리과정비를 국고로 전액 부담하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의 보육대란 논란은 사라졌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탈시설·지역거주 종합정책 수립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의무고용제 개편으로 새로운 고용모델 발굴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등급제는 폐지됐으나 종합정책 수립과 이행은 미흡함. 2019.6.5 장애인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을 위해 장애인 등록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종전의 1~6급의 장애등급은 폐지. 장애인이 서비스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고, 누락 서비스도 찾아 안내할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⑤ 복지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두루누리II 도입(지역가입자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 - 복지공무원 대폭 확대로 찾아가는 국민복지 실현 - 질 좋은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창출로 복지강국 진입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1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운소하의원 등 10인)이 통과되어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함. 2017 기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수는 '06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함.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스마트 복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대상 가구에 인공지능(AI)스피커, 사물인터넷 기기를 보급하는 '스마트 홈 서비스' 시범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19.7~'20.6), (노인형) 경기 부천시 250가구 (장애인형) 대구 남구 250가구 (경남형) 1천 가구 추진 (좋은 일자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등 처우를 개선하여 우수한 인력 유입,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전년 대비 '20년 인건비 인상률 : 노숙인시설(5.3%), 지역자활센터(4.8%), 양로시설(4.3%) 등(공무원 2.8%) 근무시간에 아동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연장보육전담·대체 교사를 대폭 충원*함. 연장보육전담교사 : 1만 2000명, 대체교사 : 700명 이를 통해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일자리가 '20년 9.6만개가 늘어나고, '22년까지 국정과제인 사회복지서비스일자리 34만개 창출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 예정임.
6.	농촌과 지방이 잘 살아야 진짜	① 식량자급률 50% + 적정농지 확보 법제화	미이행	의지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부활로 농산물 가격 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적정가격보장제로 가격 안정 - 무역이득부담금제 도입으로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농가소득 보장과 교육복지 투자로 살기좋은 농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소득 직불제로 소득증대, 청년취업농지원제도 도입 -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 1마을 1그룹홈 등 복지농촌 - 농부층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농업노동재해 보상 확대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증진직불법은 통과돼 시행되고 있지만 나머지 법률은 도입되지 못함. 2019년 12월 27일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공익증진직불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익직불제 시행 및 목표가격 수준이 확정됨. 하지만 2016.6.9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안(강석호의원 등 10인), 2016.11.7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재호의원 등 10인) 등 국회 계류 중임.
	선진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전국적 차원에서 미래산업과 뿌리산업의 전략적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지방정부의 상호협업, 민관협력을 통해 선택과 집중 • 지역 과학기술 역량에 따라 공공 R&D 투자 확대 등 지원 • 지역별 제조업 첨단연구소 설립과 혁신클러스터 구축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11.5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경자구역별 중점유치업종을 중심으로 국내외 기업, 대학·연구소 등 집적화를 통해 글로벌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는 생태계 조성 등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GDP 10% 수준을 목표로 풀뿌리 사회적경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과 시도별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조성 •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활성화로 복지확대 + 일자리 창출 • 광역도에 도민은행 및 사회연대은행 설립 추진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년 10월 18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⑤ 지방대 균형발전, 공공병원 확충 등 생활격차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대학 육성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재정지원이 2019년에 바뀌었음. 기존에 목적사업 형태가 많았던 것을 일반재정 지원 사업 중심으로 개선했음. 이 과정에서 지방대를 고려하여 지역강소대학에 추가 재정 지원이 되도록 하는 등 지방대 균형발전 요소가 어느 정도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책임형 대학 구조개혁으로 대학 양극화 해소 혁신형 공공병원 확충 및 기존 지방의료원 국립병원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됐음. 또한 올해부터는 지역혁신사업이 신성되었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소재한 대학이 인근 지자체 및 기업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관련 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지방대를 위한 사업으로 지방대 균형발전에 기여할 여지.
7.	한국탈핵2040과 국토환경 보존, 생명존중 안전사회	<p>① 2040년까지 원전의 점진적 축소를 통한 한국탈핵 실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법제개편: 탈핵에너지전환법, 녹색성장기본법·에너지법·전기사업법 등 에너지법제에 탈핵에너지전환 원칙 반영 - 에너지계획수정: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2040년까지 원전의 점진적 축소 원칙 반영 - 선진국수준의 수요관리: OECD·독일수준의 전력수요관리를 위해 에너지상대가격을 조정하고, 이를 위해 전기요금산정위원회 신설 및 기후정의세 도입 - 재생에너지의 확대: 소규모의 경우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고, 대규모의 경우 공급의무비율을 확대하며 에너지 다소비 산업체는 소비의무제도 도입. - 핵재처리 금지: 사용후핵연료는 재처리 하지 않고 직접처분을 원칙하고 고준위핵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사용후핵연료 총량 결정 이후 진행 <p>② 4대강 복원과 지속가능한 물 관리 및 국토환경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강 복원과 제2의 4대강사업 중단: 인공구조물의 해체와 4대강 및 하천습지복원여부를 결정하는 4대강복원위원회 설치,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혜선 의원이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심사중단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심상정 의원은 위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에너지전환특별법을 발의했음.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두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했으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전은 계속해서 짓고, 새로운 원전은 짓지 않도록 결론이 도출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강 복원과 제2의 4대강사업 중단: 인공구조물의 해체와 4대강 및 하천습지복원여부를 결정하는 4대강복원위원회 설치,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4대강 복원을 위한 기초 단계의 정책이 시행됨. 법 개정은 대부분이 이행되지 못함. 2017년 11월 10일, 4대강 보 처리방안 결정에 필요한 폭넓은 자료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 대상을 기존 6개 보에서 14개 보로 확대하고, 이 중 7개보는 13일부터 단계적으로 최대 가능 수위까지 확대 개방하기로 함.

		<p>친수구역활용특별법 폐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물 관리시스템 구축: 물기본법 제정을 통해 통합적·체계적·참여적인 유역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물순환법 제정을 통해 물순환사회 실현 - 국립공원 등 보호구역에 보호강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국립공원위원회 재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끌어 난개발을 방지 - 노후하고 위험한 댐의 철거와 댐건설 계획시 사용기한 및 철거계획을 수립토록하고, 댐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성을 위해 댐건설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 정비법 등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년 11월 16일 각계 추천 등을 통해 4대강 조사평가 전문.기획위원회를 구성함.
		<p>③ 발암물질 관리 강화와 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암물질 등의 관리 및 암 예방법」 제정: 대통령 직속 국가암예방위원회와 위원회 산하 암예방연구센터 설치, 암예방평가지표 설정 및 관리.개발과 암예방정책추진을 위해 중장기 단계별 목표경유해인자의 사전예방원칙에 따른 관리, 환경피해구제수단 강화 - 방사능과 전자파를 환경유해인자로 지정해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른 관리 강화 - 환경피해에 대한 사전예방관리 및 사후구제조치 강화를 위해 환경피해자구제에 대한 요건 완화와 환경피해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국가산업단지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산업단지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정미 의원이 가습기살균제구제특별법안을 발의해 소위를 거쳐 대안 반영됐으며, 2020년 3월 6일 가결됐음. 윤소하 의원이 화장품제조판매업자의 화장품 사용 완료목록의 사후보고의무를 사전보고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대안 반영 후 개정이 완료됐음.

		지역주민에 대한 노출 규제 및 건강보호 강화 -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상향하고, 위해성 관리 강화			
8.	'중견·평화·가교국가'로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달성	① 평화 환경 조성 중견국 외교 - 미·일·중·러 간 균형외교, 이익의 조화외교 - 동아시아 차원 전통적·비전통적 다자안보협력 증진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SOFA 전면개정 등 수평적 한미관계 구축 - 과거사 철저 반성 기초한 평화로운 미래 구축의 신한일관계 정립 - 제3세계발전 기여외교, 세계의 비핵화-평화군축 이바지 평화외교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권에 따른 외교 정책의 온도차가 심했으며, 통일·외교·안보 정책은 정권의 성격에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행이 쉽지 않음. 미국 중심의 외교정책으로 촉발된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조치 결코 균형외교, 조화외교가 이뤄지지 못함. (박근혜 정부 기간)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진행 중 2019년 말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기존의 강대국들 중심의 외교에서 벗어나 신남방정책등 제3국에 대한 외교정책도 펼쳐나가고 있음.
		②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 북한 핵·미사일 동결과 공격적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 비핵화-평화협정 회담 병행, 북미수교 지원 등 포괄적 타결 실행 - 남북 한라산 재구축과 협의기구 운영 - 중장기 군비통제 회담 실시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큰틀에서 이행되고 있으나 최근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제외하고는 중단됨.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중단되거나 무기한 연기됨.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수교를 위한 정부의 대내외적인 역할과 노력이 있었음. 남북연락사무소를 재가동 했으나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갑작스러운 남북관계 경색으로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못함. 2019년 9월평양공동선언을 통해 9.19 남북군사합의를 체결함.
		③ 정예강군 목표 강력한 국방개혁 - 적정병력 40만명으로 군 병력 감축 - 유사 모병제' 실시 : 4개월 의무복무 + 의무복무 이행 자원에서 직업군인 지원과 선발 - 예비전력 현대화 : 군 전력의 40%를 예비군화 - 부대 구조 단순화 : 부대 통폐합으로 경쾌하고 단순한 지휘구조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향성은 맞게 가고 있으나 현재 이행되고 있지 않음. 2016.06.20 방위산업비리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민병두의원 등 14인)이 발의되었으나 현재 계류 중 인구 변화에 따른 군 병력 구조 전환을 꾀하고 있음. 모병제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 논의가 시작됨. 여전히 군 출신의 국방장관이 임명되고 있음.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민간 출신 차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으나 이후 군 출신으로 회기됨. 방산비리 척결과 무기획득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

		-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임명 등 국방 문민화 - 방산비리 척결과 무기획득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음. 2019.09.0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김종대 의원이 발의함. 퇴역 장군의 경우 10년이 지난 후에야 국방장관에 임용될 수 있는 법. 현재 위원회에 계류 중
9.	인권사회(여성·다문화·빈민·성소수자)와 언론문화사회	④ 군복 입은 시민의 권리 보장 - 군 입대 대기기간 제로화 - 적정 급여 50만원, 보급품 완전 지급으로 빈부격차 없는 병영 - 군 의료와 민간위탁 의료 완전 무상으로 치료비 걱정 없는 병영 - 그린캠프·관심병사 제도 폐지 - 군 음부즈맨 도입 등 군인 인권 관련 법 개정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병 급여가 인상되고 있음. 치료비도 장병 개인 부담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진행됨. 2019년 기준 이등병은 30만원, 병장은 40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고 있음. 정부가 발표한 국방개혁2.0에 따르면 병사가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제도를 보면 진료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비 전액을 가 지원한다. 군병원에서 진료 가능 질환을 민간병원에서 진료하면 70%가 공단 부담금인데 이를 실손보험으로 커버하고 30%를 개인이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힘
		⑤ 남북 경험 등 교류협력의 활성화·제도화 -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철회와 조속한 재가동 추진 -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상설화 - 남북경제사회협력강화협정 체결로 경제공동체 형성의 제도적 뒷받침 - 유라시아대륙 경제시대 구축으로 유라시아대륙과 태평양의 가교화 - 특사 파견 혹은 조속한 당국회담 재개, 국회·지자체·민간의 교류 재개 → 정상회의 등 각급 당국회의의 정례화	미이행	의지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성공단 중단 지속.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 안 되고 있음.
		① 여성분야 - 사회서비스 종사자 임금 인상과 좋은 일자리 보장 * 감정노동보호 및 예방조치, 인격적인 노동문화 형성 - 일·가정 양립 정착으로 여성 경력단절 문제 해소 * 임신부터 보육까지 국가책임제 :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4.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2018.5.16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1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의원 등 10인) 등 각종 성폭력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 2019.2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발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아동수당 확대 사회적 논의, 국민행복

	<p>방문건강관리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대(임신,육아,돌봄) 휴가제 확대 : 임신 초기 휴가지원 등 - 성폭력 관련 법.제도 개선, 직장내 성희롱예방 강화 - 데이트폭력, 스토킹, 온라인폭력 등 3대 폭력 대응 * 한국형 클리어법(영국의 가정폭력전과 공개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토킹 처벌 강화, 온라인 인권교육본부 설립 - 과도한 미용.성형산업 및 과장광고 규제 강화 * 성형수술시 의료진의 설명의무 준수, 외도지상주의 조장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드 금액 인상 등을 통해 출산.양육비 부담 대폭 감소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당연한 권리로 정착시키고, 남녀 평등한 일터와 육아를 위한 캠페인 실시 ▪ 영유아부터 초등학교까지, 시설 뿐 아니라 가정 내 돌봄까지 태어난 아이들은 확실히 돌보는 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점상과 지역이 상생하는 노점기본법 추진 * 노점단체, 시민단체가 노점실태조사 및 기본정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에 지자체의 상상대책을 뒷받침하는 위원회 구성 - 식품위생법, 행정대집행법 개정 및 과태료 남용 금지 * 노점의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와 위생기준 마련 * 노점에 대한 과도한 행정대집행 최소화, 집행절차 규제 * 지자체의 과태료 남용 제한, 전통시장내 노점상 보호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점기본법 제정안 발의되지 않음.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통과됨. ▪ 불합리한 제재처분에 있어 영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여성 및 이주아동 분야 - 이주여성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적 기본권 침해 구제 * 국제결혼 중개 과정에서의 국적취득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11.22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 발표 : (초기적응) 이주여성 입국 전·후 개인정보 등의 후 다문화가족센터 연계하여 사례관리 등 다각적 지원, (신속대응·피해자 보호) '112다국어 신고앱'을 통한 모국어로 신고·도움 요청

	<p>및 체류권의 문제 해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여성 위기개입시스템과 구축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등록 이주아동, 무국적 아동의 권리보장 강화 * 출입국관리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및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확대, (불법중개 근절) 국제결혼성(性)상품화 광고행위 집중단속, 적발 시 해외서버 차단 요청 후 운영자 추적을 위한 인터폴 등 국제공조수사 추진 ▪ 2019.9.16 이주여성 위한 최초 폭력피해 상담소 대구에서 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소수자 인권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트너십제도 도입으로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 혐오표현.혐오범죄 처벌 법제화, 성전환자성별변경특별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교육기본법 제정, 국가인권위원회내 인권교육원 설치 - 차별금지법 제정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3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양형기준을 의결하면서 형량을 가중할 수 있는 특별 양형인자 중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에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이나 혐오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포함시킴. '별다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이나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무차별(무작위) 범행 또는 범행 자체를 즐거워 저지른 경우'도 넣음. ▪ 2018.8.4 인권교육지원법안(정성호의원 등 20인)이 발의됐으나 철회됨. ▪ 각종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다만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⑤ 언론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력기관을 비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 MB 악법으로 실종된 언론독립과 시민주권 회복 - 디지털시대에 맞는 방송통신의 시민권리 실현 - 지역미디어센터, 공동체라디오.TV 등 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경 없는 기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2019년 세계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41위를 기록하며 3년 연속 순위 상승을 기록,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됨. 한국은 올해 아시아에서 가장 언론자유도가 높은 국가가 됨. ▪ MBC 사장 심사에서 시민참여 구조를 만들. ▪ 이전 정권의 이른바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한 언론사 대표 및 고위 간부에 대한 교체.
10.	<p>국민을 닮은 국회, 잃어버린 민주주의의 회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돈/금수저/부정축재/무자격/부도덕 5대 불량정치 퇴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량정치인에 대한 20대 총선 공천 배제 등 '국민눈높이 공천 재보궐 원인제공 정당의 공천 포기'와 선거비용 50% 부담 등 '공천 무한책임제' ② 국회의원 세비와 고위공직자 보수의 최저임금 연동제 도입 	미이행	의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대 기준 어느 것 하나 반영되지 못함. ▪ 재보궐 원인 제공 정당에 대한 페널티도 도입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국회의원 세비와 고위공직자 보수의 최저임금 연동제 도입 	미이행	이행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 발의했으나 처리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원과 장차관급 위상 고위공직자 보수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 세비는 현재 연봉 1억 4천만원에서 7,562만원으로 삭감 - 의원 수당 증 목적과 사용처가 불투명한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폐지 등 - 세비삭감으로 절감한 187억원은 국회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입법지원 강화에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원 세비의 투명한 공개 및 독립적인 민간심사기구에서 세비 산정 				
	<p>③ 국민을 위한 선거개혁으로 양당독점체제 타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국민 의사를 반영한 국회 -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다수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 - (띠)선거연령 인하, 노동자 투표권 보장 등 정치 참여 확대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 결선투표제는 도입되지 못함. 	
	<p>④ 국민을 닮은 국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섭단체제도 개혁으로 다수당과 소수당이 공존하는 정치 -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상설화, 예결특위의 상임위원회 전환 	미이행	이행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섭단체 요건 완화 국회법 개정안 발의했으나 처리되지 못함. 	
	<p>⑤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책임지는 정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재난안전협업체계 구축과 고위공직자 관피아 방지 - 김영란법 재개정으로 부정청탁 방지, 문지마 특수활동비 축소 - 무분별한 규제완화 반대, 공공기관 개혁과 공공성 회복 	미이행	의지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영란법 적용 기준이 완화됨. ▪ 각종 사안에 대해서 규제완화가 본격화됨.(의료민영화, 개인 정보보호제도 완화 등) 	

	<p>① 테러방지법 폐지,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반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원을 해외정보원으로 전면개혁하고, 국내 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금지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러방지법 존속. ▪ 국정원의 국내 파트 2개국 폐지됨.
	<p>②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사찰과 도감청 방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통신제한조치 요건강화, 긴급통신제한조치 남용방지 등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내용이 일부만 반영됨. ▪ 2019년 11월 27일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 됨.
	<p>③ 검찰 개혁과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검사를 상설기구로 운영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구성 	부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을 다양화하려는 시도가 있음.
	<p>④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국정교과서 제도 폐지</p>	완전이행	이행관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5월 12일 대통령 지시로 국정교과서가 폐지됨.